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14일 저녁 종로의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는 자꾸 '10년'을 되새겼다. 10년전 아들의 뺨가루를 한탄강에 뿌렸던 그 아버지는 이 겨울 날치기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있다.

안기부의 불법수사 때문에 학생이 분신하고, 개악된 노동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야 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마저 투쟁을 한다. 복사한 종철이의 영정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고문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외치던 사람들, 흰 머리 수건을 둘러쓰고 울부짖는 어머니들-대강당 입구 로비 벽면에 걸린 사진들은 당시의 절실함을 전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10주기 추모제가 열리던 그 시각 파업 지도부가 머무는 명동성당은 경찰이 셋길까지 막아 아무도 근접할 수 없었다. 김영삼 정권은 최초의 문민정부답게 초기에는 인권개혁의 의지를 밝히곤 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입사도 그렇고, 심지어 정부의 인권정책을 설명한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방어적인 인권만이 아니라 환경·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적극·진취적인 복지인권의 신장을 위해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 (개혁과 인권, 법무부, 1994년 3월, 88쪽)

그런데, 이런 의지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김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당이 저지른 불법행위마저 부정하는 종철이를 죽인 독재자의 모습-그는 권좌에서 물러난지 채 10년도 못되어 감옥에 갇혔다. 을 닮고 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

을 보호하고 신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지 못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만이 정당하다고 강변할 때 그것은 이미 저항권의 대상이 되는 독재자일 뿐인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들은 늘 국민의 총복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 했다. 즉, 대통령은 근대적 인권개념조차 모르는 채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곧 법이라고 오만을 부리곤 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인권을 학습하는 일이다. 인권에 대한 무지로부터 이처럼 엄청난 전근대적인 언행을 저지르는 것이리라. 필시 김대통령도 세계인권선언조차 단 한번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은 스스로 주장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항권은 인권개념이 탄생하던 근대 초기 존 로크로부터 확립된 인권개념으로 이제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안기부법을 개악한 것이 이런 저항을 제거하는 선봉부대로 안기부를 활용하겠다는 심산이었지만, 6월항쟁에서 경험했듯이 이미 시작한 저항은 억누를수록 거세게 타오른다는 진리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서 느낀 교훈은 **'국민적 기본권을 짓누른 권력자들은 언젠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기본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제한 저항밖에 없기 때문이다.



날치기 주역 김철민 코발, 유권자 75명

김택성(서울민주시민연합 의장), 심성구(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 의장)씨 등 유권자 75명은 1월 28일 오전 11시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주역인 김수한 국회의장 및 오세응 부의장, 이흥구 신한국당 대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날치기로 인해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받았다"며 오세응 부의장과 이흥구 대표를 업무방해혐의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김수한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유린 논란 불온통신 규제' 철회

정보통신부는 이달초 입법예고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중 위헌 논란을 빚어온 '불온통신 규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조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수사기관이 불온통신으로 판단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정통부 장관은 일반이용자의 통신을 제한토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이들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과 통신 이용자들은 지난 11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이들조항은 통신 이용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문 민 독 재
싫 어 요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소요를 위한 범국민대행의 사업

- 1월28일 14:00 안기부앞 항의집회
지역은 지역 안기부 앞
- 1월29일 10:00 사회단체 대표자 초청
설명회 향린교회
- 1월30일 14:00 시민헌법재판 (민변)
- 2월 1일 국민총궐기의 날
- 2월 2일 13:00 "대통령 아저씨, 날치기였다
고 한마디만 하세요"
문화집회, 종묘공원

각계 동향

- 전국 교수 27일-29일까지 농성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전국서명교수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월 27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전 10시까지 민교협사무실에서 「노동법개정의 완전무효화와 안기부법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 교수 농성」을 한다.

- 1/30일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서초동)에서, 신한국당의원만으로 국회를 날치기통과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에 대하여 그 위헌성을 묻는 시민헌법재판을 개최한다. 이 시민헌법재판은 우리사회에서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각계 인사들과 관계전문 학자, 법률가, 시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실제의 헌법재판에 버금가는 절차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국민 여론과 쟁점을 충실하게 다룰 것이라고 한다.



반

핵폐기를 매립반대

대

그 동안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갈라진 형제인 북한의 실정을 이해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성을 주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문제가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해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북한의 정보만을 토대로 우리와 다른 체제를 살고있는 북한을 함부로 재단하여 냉전시대의 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의 보도를 통해 북한의 핵안전위원회가 대만의 국영전략공사와 북한의 핵폐기물을 6만 배럴을 북한에 매립하기로 하는 비밀협정을 체결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비인도적인 행위입니다.

대만은 자국에서 생산된 핵폐기물을 경제적으로 곤경을 겪고있는 북한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생산되었지만 환경과 안전의 이유와 주민들의 반대로 매립하지 못하는 핵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돈을 주고 수출하겠다는 대만의 계획은 인류의 보편적 생존권이나 환경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으로서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널리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미래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올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언젠가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할 갈라진 형제로 생각하기에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히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책임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만의 핵폐기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핵폐기물 수입은 북한 인민의 생명, 나아가 통일된 조국의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폐기물 수입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두단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포애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 극복을 위해 기도와 실천을 할 것입니다.

1997년 1월 24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공동대표 文奎鉉 신부, 張容珠 신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 金亨泰 변호사)

평화마을
청년마을
정보마을

평화와인권

제 64 호

1997년 2월 17일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평 화 마 을'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김 대 원

정의평화 정보센터 ③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금정이성지 어린이집 2층)
전화 : 0652 - 76 - 1253 / 팩스 : 74-7486 / ID : (나우컴, 녹두BBS) 평화마을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 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단적인 예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인권수호'의 차원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본격적인 법률대응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연합 민생공의 김남곤, 권기혁 씨는 지난 1월 26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길이 80m 짜리 대형 플래카드를 경찰에 압수 당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김한조 영등포서장과 최한철 정보과장 등을 강도 및 폭행죄로 남부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1월 28일자 참조). 이에 대해 경찰은 문제의 플래카드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용품'이었기 때문에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을 조사중인 담당 검사도 '고소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며, 따라서 물품압수와 그 과정에서의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김남곤 씨에 따르면,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노 검사(305호)는 "한국노총이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한총련 등 사회단체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오히려 김 씨 등이 집시법을 위반했음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즉 집회에 참가한 것 자체를 불법행위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는 집시법에 대한 악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관련조항인 집시법 제4조는 주최측의 입장에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기욱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는 "주최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그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주최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에도 참가 배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으며, 설령 경찰과 주최측간에 특정인의 배제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이상 집회 참가가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 신고와 시위방법에 관한 조항인 집시법 제6조와 시행령 제2조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플래카드의 경우, 경찰 측은 해당자들이 관련조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기욱 변호사는 "몽둥이나 쇠파이프 같은 폭력시위용품은 불법시위용품이 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의사표현 방법인 플래카드 제작행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시행령 2조 8항의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조항이 경찰의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라며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경찰의 폭행부분에 대해 담당검사는 고소인들에게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맞아도 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변호사는 "미신고 물품이라도 강제로 폭행하여 빼앗는 행위는 명백한 강도행위"라고 밝혔다.

이미 전국연합이 이 사건으로 관련 경찰을 고소한 데 이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도 조만간 고소에 들어가기로 했다. 두 단체는 형사고발에 이어 민사소송 제기 및 검찰무혐의 처리시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 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노동법 · 안기부법 개악안 무효화 투쟁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정기대의 원대회를 통해 14일부터 단위노조 차원의 총파업 결의를 모아내기로 하여 2월 24일~28일에 총파업 투쟁일정을 확정 · 발표했다. 또한 노동법 · 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도 움츠러들었던 투쟁 동력을 재가동하고 나섰다.

범국민대책위는 13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부문별 · 지역별 투쟁 방침 등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농민 · 여성 · 교수 · 변호사 · 보건의료인 등 각 부문별 집회를 포함해 전국동시다발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강연회와 토론회, 세미나 등 집회의 행사도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연석회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17일부터 23일 사이에 노동법 · 안기부법과 관련한 전국순회강연이 열리며, 2월 하순경 백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법 재심의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회

를 다음주중에 가지며, 20일엔 노동법 · 안기부법 개악철폐를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를 개최한다.

범대위는 안기부법 무효화 투쟁의 일환으로 19일 전국의 안기부청사 및 지부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가지고, 27일경엔 안기부법 관련 국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4일 단위노조별 총파업 결의를 시작으로 15일 '날치기 노동법 · 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재발 · 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전국 단위노조 간부들이 철야농성을 통해 비상대기에 들어가면서, 22일까지 준법투쟁 및 집회투쟁을 거친 뒤, 24일에서 28일 사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야당이 불철저한 타협안을 제시할 경우, 야당농성도 돌입하기로 했다.

2월 하순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세력이 총파업 철폐 이후 현저하게 떨어진 조직력을 어떻게 재가동할 수 있을지, 한보사태 등으로 분산된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 몰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부터 봄방학 시작 전까지 전국의 각 학교별로 날치기 통과 및 노동법 등과 관련된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총파업 사태의 원인과 내용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올바르게 그리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공동수업에 대해 정부는 즉각 교사징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파업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을 기대해 본다.

강희남 목사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
- 특별면회 -

지난2월4일 천주교 정의구현전주교구 사제단 소속 문정현 신부, 이수현 신부, 김훈 신부등 3인은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강희남 목사를 특별면회 하였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좀 더 많이 배포되고 좀더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정기구독해 주시는 만큼 가능해 집니다.

전국은행 535-21-0027850 우체국 402297-0053040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예금주: 전준형

위해 투쟁하셨던 목사님을 민주주의를 극단적으로 탄압했던 유신독재 시절에도 쉽게 구속하지 못했는데, 민간정부라 하는 김영삼 문민독재정권이 혹독하게 탄압을 자행하여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하루빨리 독재의 울타리가 무너져, 자유의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해 본다.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 분신기도**

지난 10일 새벽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분신을 기도한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격기3) 씨가 입원한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 출입구와 복도는 갑작스런 선배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생들로 가득 찼다.

11일 오후 3시, 전신 3-4도에 90% 화상을 입어 의사로부터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소식과 이날 새벽부터는 의식마저 잃어버린 상황이 전해진 탓인지 분위기는 침울했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씨의 분신은 가정문제로 인한 비관자살이라 보도한 언론이나 경찰, 학교측의 이야기와는 달랐다. 한 씨 어머니 또한 "집안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9일부터 한 씨와 함께 있었고 맨 처음 불길에 휩싸인 그를 발견한 총학생회 간부 홍야무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실은 보다 명확해졌다.

사건 바로 전날인 9일, 설 연휴를 마친 총학생회 간부들은 총학생회실에서 모임을 갖기로 약속했다. 밤 10시부터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밤 12시경 얼굴을 비친 한 씨는 1시간 가량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 물론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새벽 1시경 자리를 비운 뒤 술자리가 파하는 새벽 3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흥 씨는 새벽 4시 30분경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서 문밖으로 고개를 내미니 화

기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복도 끝부분에 불이 붙어 완전히 쓰러져 있었어요. 그

는 몇 번이나 운동 열심히 해라, 나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지요. 제가 담요를 갖다가 불을 끄고, 뒤이어 나온 한 학우가 물주전자를 들고 나왔어요. 그 뒤 구급차를 불러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그는 말하기 힘들어했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생활해라'는 말을 했죠."

흥 씨는 비록 한상근씨가 유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분신 이유를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현시국에 대한 고민과 신임 동아리연합회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학원 자주화추진위 중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 담당자로서 고민등이다. 특히 학자추 부분은 학교측 관련 자료 수집에서부터 마찰이 심했다고 한다.

또 10일 오후 5시 중환자실에서 한씨의 형과 이모 및 KBS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는 "분신이 유가 뭐냐, 학내문제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상근이는 의협심이 강하고 애국심이 남다른 학우입니다. 일본의 독도망언이 있은 직후 일본대사관 점거투쟁에서 대사관 담을 넘다 잡혀 불구속이 되기도 했고, 김형찬대책위 농성단 활동으로 15일간 명동농성을 벌이는 등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시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요. 우리 모두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열심히 투쟁해 나갈 것 입니다"라는 한 학우의 이야기 속에 한상근 학우의 분신이 현실 대학사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행사안내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제2차 정기 대의원 대회
일시:19997. 2. 17(월) 오후2시
장소:동학혁명 백주년 기념관

전북여성운동연합

제5기 대의원 대회
일시:1997년2월20일(목) 오후2시
장소:전라북도 여성회관 1층 소회의실

정의평화정보센터

2월 인권강좌

주제: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인권
일시:1997년 2월 20일
(목) 오후7시
장소:동국아파트 후문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1층 강당
문의전화 : 0652-76-1253
초청강사 : 진봉헌 변호사

표준 생계비 현실적 삶과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다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1996년 12월 6일 물가기준, 단위:원)

비 목 별	단신남자	단신여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식료품비	210,125	204,230	354,859	442,679	597,380
주 거 비	201,837	201,837	237,288	301,708	438,750
광열수도비	35,729	35,729	43,443	44,041	54,713
가구가사집기비	37,183	36,718	100,896	106,154	114,632
피 복 비	74,072	85,200	135,081	150,139	167,979
교 육 비				3,000	200,070
교통통신비	55,920	55,920	78,603	284,194	285,392
보건위생비	54,419	78,913	127,225	134,691	158,888
교양오락잡비	232,133	195,833	270,133	275,133	270,133
조세공과금	57,379	55,671	98,187	145,692	300,951
생계비 합계	958,797	950,051	1,445,915	1,887,915	2,588,888

민주노총에서는 표준생계비를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생계비를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평균적인 생활실태를 토대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품질을 증폭으로 설정했고 4인가구 이상의 주거유형을 자가로 설정했고, 3인가구 이상에서 승용차를 보유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밖에도 사교육비를 반영하였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위해 교양오락잡비와 외식비에서 변화된 실태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주거비 목적 이외에 노후생활 대비 등을 위한 저축이나 부채를 반영하지 않았고 주거평수, 외식비, 술값, 사교육비 등은 실태보다 하향 조정하여 가능한 한 생계비를 최소화하였다.

정의평화정보센터

제1회 인권학교 개강 안내

- 명 칭 : 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인권학교 봄학기
- 일 정 : 3월 21일 ~ 4월 25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총 6개 강좌)
- 장 소 : 숲정이 성지 어린이집 2층 강당
- 모집인원 : 80명
- 수 강 료 : 3만원 (교재비 포함)
- 후 원 : 각 사회 민주 단체, 언론사
- 주 최 : 정의평화 정보센터,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 사제단



평화와인권

제 6 5 호

1997년 3월 17일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평 화 마 을'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김 중 섭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숲정이성지 어린이집 2층)
전화 : 0652-76-1253 / 팩스 : 74-7486 / ID : (나우컴, 녹두BBS) 평화마을

이제 정보 독재 시대마저 도래한다.

- 내무부, 주민 등록법중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3월7일 내무부는 주민 등록법 중 개정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본격적인 전자 주민카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지난해 6월 내무부 발표 이후 인권 단체의 (평화와 인권 60호 개재) 반발을 일부 수용하려는 의미로 보이나 사실은 내무부의 기본 발표안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입법 예고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 카드로 변경 · 주민카드 열람자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 주민카드 악용자의 벌칙 강화 · 주민카드 본인 관리 책임 강화로 되어 있다.

개인의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하나의 카드 속에 담은 전자주민 카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국민에게 지문과 의료 등의 개인

신변 정보가 들어있는 전자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과거부터 줄곧 안기부 사찰, 블랙리스트등 사생활 침해가 줄곧 있어 왔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인권유린 국가인 우리 사회에 이러한 카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국민을 국가에 대한 두려움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 설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카드에 개인의 지문 정보를 안기부의 요구로 수록하기로 함으로서 이제 전국민은 범죄예방이란 목적으로 인하여 예비 범죄자의 누명을 쓰게 된다. 이러한 보안체계의 관리를 안기부가 담당한다고 보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OECD가 1982년 정보수집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정보 주체의 확실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자신이 공여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등 5가지의 원칙에 현 카드 제도에 부합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안을 도입하였던 한 상원 의원은 "정부가 개개의 국민에 알 수 있는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정부에 양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나 다른 어떤 기관이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들이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더욱 커진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않는한 권리는 허튼 소리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안기부법 개악이 발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국가는 일상적으로 국민 모두를 감시, 통제하려는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고 진행하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프라이버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 나가자.

정의평화정보센터 INP(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 발족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INP가 "정보독점 반대- 정보민주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북지역의 정보민주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와 격려 바랍니다.

◆ 일 시 : 3월30일 (일) 오후 2시 ◆ 장 소 : 숲정이 성지 어린이집 강당

이글은 장기수로 대구 교도소에서 복역중 (시인.월북혐의)인 박영희씨가 신부님들의 편지에 답하신 내용을 정리 한 글입니다.

(편집자주)

문정현 신부님께....

저는 그런 데로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러잖아도 이번에는 성서 공부라도 제대로 해보려 겠다는 욕심으로 7년 과정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 이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버렸다면 저의 믿음도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었을 지도. 그러나 되살아 나셨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러나 레니을 접하면서 그 색이 변질되어 갔는데 저에게 참으로 고통스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에도 저는 제일 존경하는 어의 물음을 물으면 레니과베토벤 입니다. 그러나 이념과 계급성은 퇴보를 거듭했습니다... 어찌 이런 이야기들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통일이 되면 저와 주님만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고백하듯 털어놓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신 최근에 쓴 시한 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청운 스님!

어디를 가든 떠난다고 생각지 마라.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여라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따뜻한 별길이 될 것이니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다. 먼길을 ...

이번으로 네 번째 이다 보니 짧은 시간에 대부분의 교도소를 순례한 셈인데 순례하면서 정치범들과 살다 보니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신념이 분명한 사상가들 비롯해서 제가 봐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분단의 희생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저는 많은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어곳도 정쟁입니다. 여기 어곳도 정쟁입니다.

37년 옥살이부터 시작하여 10여년 징역살이들이 수두룩하니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진실과 정의, 인간의 모습들이 되살아나서 자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1997. 2. 27일

대구옥에서 박 영 희 드림

이광철씨 무죄 석방 환영대회

이광철씨 무죄석방 환영대회 (주최: 전북연합)가 안기부법 개악 저지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 대회 형식으로 3월 5일 목원가든에서 전북연합 김형욱 정책실장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열렸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으로 경과보고 및 담당 변호사인 임종인씨의 환영인사-이광철씨 인사, 환영노래 공연과 민가협 의장(오경숙)의 결의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된 이 자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광철씨의 인사말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광철씨는 조작된 구국전위 사건에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나긴 시간을 앓아왔던 터널의 시간으로 회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여러 동지들의 뜨거운 동지애와 사법부의 용기있는 판단, 가족들의 애정으로 인해 무죄로 석방되었다고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강희남 목사님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계속 싸워나간다는 결의로 이후 안기부법 개악 저지 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청소년 안전권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시민모임 발족

지난 1월16일 무주 스키장에서 중학교 1년생 이희민 군이 사고를 숨진 것을 계기로 몇몇 의사들이 청소년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 청소년의 안전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을 (대표 정영원. 의사) 결성하고 청소년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사회보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정영원 대표와 최준열 우석대 교수, 윤찬영 전주대 교수등이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 자리에서 청소년의 사고를 본 인간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시설,설비보완, 지속 가능한 교육등과 아동 및 청소년 재해 보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국에서는 최초로 청소년의 안전할 권리를 (청소년 안전권)위한 모임의 발족만으로도 그 의의가 있는 청의는 앞으로도 계속 공청회, 법적 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故 박복실 (요안나)동지 추모미사

전북지역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신 故 박복실 열사의 삶을 기리는 추모 미사가 익산 노동자의 집과 (가칭) 전북 여성 노동자회 준비위 주최로 3.11일 익산 노동자의 집에서 있었다.

이수현, 오정선, 최종수, 김훈 신부님의 미사 집전으로 진행된 이번 추모 행사는 87년 이전에 활동하셨던 여성 노동자 선배님들, 지역 민주노총 간부, 노동단체 회원등 70여명이 참여하여 고인의 죽음을 기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다짐의 자리였다.

특히 박복실 동지로 하여금 노동자의 현실을 눈뜨게 하신 이철순(한국 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님의 말씀은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적시게 했다.

-박복실(요안나)의 삶 : 71년. 김제 용지 중학교 졸업, 태창 메리야스 입사 79년. 카톨릭 노동 청년회 활동 시작 81년. 태창 메리야스 노조 위원장으로 전북지역 최초의 민주노조 운동 전개 82년. 전두환 정권 시절 노조 탄압으로 해고 이후, 계속된 해고, 블랙 리스트 철폐투쟁, 87년 전북지역 민주노조 운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다 91년. 위암 수술을 받고 8개월간 투병 생활 92년. 노동자의 새세상을 위해 온몸을 바쳐 살아온 박복실 동지 운명

행사 안내

◆강희남 목사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일시 : 3월17일 월요일 12시
장소 : 중앙교회(한성여관 앞)

◆전주교사회운동 활성가성찬례

일시 : 97년 3월 24일(월) pm4시
장소 : 숲정이 성지 어린이집
미사 : 문정현, 이수현 신부

녹두비비 회선 증설

기금 마련 일일호프

주최 : 정의평화정보센터 INP (정보 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

일시 : 4월5일 (토) 하루종일
장소 : 경기장 건너편 레지스탕스 호프, 토요일 술잔잔을 레지스탕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인권학교

총 6 강좌 ----- 매주 7시
◆ 일시 : 1997년 3월 21일 (금)
◆ 장소 : 숲정이성지어린이집

1강좌 - 인권이란 무엇인가?
강 사 - 서준식 (인권운동가)

2강좌 - 정치 기본권 실현의 현황과 과제
강 사 - 김형태 변호사

다음호에 계속

정기구독안내

전북은행 : 535-21-0027850
국민은행 : 506-21-0876-764
우체국 : 402297-0053040
농협 : 508-02-053278

예금주 : 전 준 형

여야 합의 노동법에 대한 사제단의 견해

노동법 개정의 기본정신과 쟁점에 대한 사제단의 견해

1. 노동법 개정문제가 여야 논의로 넘어간 후 우리 사제단은 그 결과를 주목해 왔습니다. 이제 여야의 입장 정리를 통하여 합의를 본 노동법 개정안을 보면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신부)은 복음정신과 가톨릭 경제윤리의 입장에서 노동법 개정의 기본정신과 쟁점사항의 해법에 대한 견해를 밝힙니다.

2. (여야 합의안 총평) 여야의 대립적 쟁점들을 상호수용한 것은 인정되나 내용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경영자들의 논리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날치기 개악 이전의 상태에서도 합의될 수 있었던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3. (개정 기본정신) 노동법 개정의 기본정신은 공동선에 충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선에 충실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 개개인으로서 더욱 완전하고 쉽게 자계완성을 달성하게 하고 아름다운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과 발전의 목적 자체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중심으로 한 인간화의 성장에 기여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4. (쟁점사항의 해법)
가. 경영자들의 논리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이른바 '선진국 사례'인데, 문제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복지와 기업윤리도 없이 선진국 수준의 노동법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합당한 사회복지에 주력할 의무가 정부와 기업에 부여됩니다.

나. 정리해고제는 퇴직연금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정리해고제는 노동의욕을 도모할 수 없고 정신적 불안상태의 노동은 가정의 안정적 삶을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다. 변형시간 근로제가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필요함을 인정하나 자녀와 가족을 가진 노동자들의 생활양식을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주일 정도의 단위기간과 평상임금이 삭감되지 않은 선에서 절충되었으면 합니다.

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문제는 산별노조의 부활을 전제하여 합의되어야 합니다.

마. 교원노조는 즉시 인정되어야 한다. '교사가 노동자인가'라

는 문제는 한국보다 질적, 윤리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선진국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 방위산업체 및 공무원 노동조합 규제 문제는 戰時와 이에 준하는 사태에 한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 무노동 무임금 논의는 실질기본생활급, 근속연한, 파업일수 등의 요소가 반영되는 선에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견해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경제를 죽이는 길'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가 사람을 살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며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절대적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업성장과 경제발전의 혜택이 이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토론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기본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재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997. 3. 11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평화와인권

제 66호

1997년 4월 1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평화마을'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문만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금정이성지 사회관 2층)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ID: (나우컴, 천리안, 녹두BBS) paulmun

특 권 의 시 대 끝 내 자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학교 첫 개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과 정의평화 정보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인권학교가 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숲정이 성지 사회관에서 시작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인권운동사랑방'(02-715-9185) 대표 서준식씨는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국제인권조약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각국의 헌법에 명문화된 인간의 권리들을 지키고 구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하고, 또한 '인권'을 보는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의 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권'은 역동적인 개념이라며, 근대시민혁명기 민중과

함께 싸워 봉건체제를 전복했던 부르주아지가 집권세력이 된 뒤에는 인권을 '시민권'이라 지칭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갈등관계를 은폐해 온 과정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역사의 현단계에서 인권이 어차피 완벽하게 만민에게 보장될 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겠느냐고 자문하고, 그것은 민중의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국의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권 (복지 아닌 '권리'로서의 사회권) 분야에 대한 관심과 풍부한 자료가 떠받치는 과학적 운동, 국제연대, 그리고 질 높은 이론가·활동가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인권에 대

한 교육(학교에서 '인권'을 가르쳐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강연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쇄도했는데,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권개념이 이데올로기와는 어떤 관계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균형 잡힌 인권개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권은 결코 천진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인권운동가로 활동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은 강사의 위트에 간간이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예정보다 한 시간여 늦게까지 진행되었다.

제 1회 인권학교 계속됩니다.

총6강좌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장 소 : 숲정이 성지 사회관

3강좌 : 지방 사회복지 정책과 시민의 권리 - 윤찬영 (전주대 교수)

4강좌 : 가정에서 여성이 누려야 할 권리 - 안혜성 (여성민우회 가정과 성 상담소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 정치기본권 실현의 족쇄 국가보안법 성토

인권학교 제2강좌가 '정치기본권 실현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3월 28일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석태변호사(민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들고, 이 법의 탄생과 성장과정, 위헌성 등을 소개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상의 결사와 표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북한과 수교를 맺은 국가에 남한이 수교를 하는 것 또한 반국가 단체와 교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낳게 한 비상식적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남한의 정치권력의 역사에서 항상 보수 정치 권력을 온전히 보존시키는 구실을 해왔다. 미군정에서부터 현재의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은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수구 반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유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왔으며 국가권력이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진행되어왔다. 강사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보안법에 대

한 학술적인 연구와 논문의 축적, 시민들이 생활에서 서로 토론하고 교류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국민적 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안기부법
통과 여파로 인
권유린 잇달아
전주대학생 4명 구속**

전주대학교에서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9명이 구속된 데 이어 올해 같은 혐의로 4명이 연행 구속되었다.

지난 3월 20일 새벽, 학교를 졸업하거나 휴학하고 군복무중이던 전주대학교 학생 4인이 전격 연행되었다. 구속된 4명(송신원 92학번, 두용현 91, 한홍운 93, 오광모 93) 가운데 1명(송신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중 중 구속되어 95년 전북 지역 학생연대(추) 의장 경력과 96년 활동을 이유로 현재 전북

도경 대공본실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1명(한홍운)은 불과 제대 5일을 앞두고 연행되어 다른 2명과 함께 군 기무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의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사건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사회운동단체들은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 26일에 통과된 개정 안기부법이 벌써 시행되고있는 징후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안정국,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전주대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과거 학생운동 전력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조작된 현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공안탄압의 결과"라고 결론짓고 민주세력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통일인사 강희남 목사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발족식

<통일인사 강희남 목사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발족식>이 4월 7일 오후 7시 30분 '동학혁명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강희남牧사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해 오셨다. 김영삼 문민독재는 또 다시 그를 영여의 몸으로 남겨 두었다.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

<평화와 인권> 이 좀 더 많이 배포되고 좀더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정기구독해주시는 만큼 가능해 집니다.

전북은행 535-21-0027850 우체국 402297-0053040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예금주: 전준형**

정의평화정보센터 INP (정보민주주의 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 결성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에 대한 설명회도 가져-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문규현)는 3월 30일 전주 숲정이 성지 사회관 강당에서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INP, 단장 임창현)을 결성했다.

INP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인권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정보소외계층의 확산 문제 등에 대한 의식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P의 임창현 단장은 "정보가 독점되고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가 결코 우리의 기대처럼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성식에는 각계의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판 노비문서'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INP에서 제작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상영되었다. 사업단은 우선 사실 전자계시판인 '녹두BBS'를 통해 통신검열 반대운동 등 조직적인 정보민주화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사업부는 홈페이지 구축 등 시민·사회단체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컴퓨터교육

팀과 '아리컴'은 컴퓨터 교육과 판매, 설치대행 따위의 활동을 통해 각각 사업단 재정을 뒷받침하게 된다.

인터넷사업부는 이미 민주노동전북본부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총과업을 지원한 바 있고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과도 홈페이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팀은 현대자동차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중이다. 95년 10월부터 운영된 녹두BBS는 이미 전북지역 회원 1천여명을 확보할 정도로 독자적인 활동공간과 영향력을 확보했다.

사업단은 지역에 바탕을 둔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운동을 기치로 공격정보의 공유와 사적정보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창립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정의평화정보센터, 전자주민카드에대한 반대 의견 제출

-내무부장관 앞으로 의견서 제출-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문규현 신부)는 3월 26일, 최근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정보센터는 이 의견서에서 "우리나라처럼 권위주의가 잔재하고 민주적 통제가 어려운 나라에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등을 어기고, 미국 호주 등 정보선진국에서조차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하지 못한 주민카드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히고 "국가의 정보화 추진 정책의 지나치게 국가능률적인 측면과 행정편의적 발상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 권고안인 "개인정보파일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지, 정보주체의 동의 및 정보주체는 자신이 공여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실행계획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전자주민카드를 21세기형 노비문서로 간주하고 공청회와 민중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내는 등 다양한 입법저지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법각인권

인권의 역사와 개념, [세계인권선언] 등 현대사회에 들어 체결된 국제인권조약들과 국제인권기구들을 폭넓게 수록 해설한 최초의 인권개설서가 [법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에서 나왔다. 원래 대학교재용으로 나온 이 책은 그동안 암암리에 인권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입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15-9185).

통일맞이 겨레사랑 운동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가 범국민적인 '통일맞이 겨레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이미 '북한수해동포돕기운동'을 펼쳤던 민족회의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이 통일운동권만의 과제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첫 번째 단계로 1인 1만원 내기 등을 통해 1달에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를 모금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정확한' 식량사정을 알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각종 국제기구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연 3백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어 북한의 식량난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임을 전하고 있다. 다음은 북한 식량실태에 대한 주요 통계수치와 자료이다.

*북한 식량 실태에 관한 주요 통계 수치 (단위 : ton)

발 표 국 가	'95년 생산량	'96년 수요량	부 족 량
남한(통일원)	3백 45만	5백 8만	1백 63만
북한(조선기독교도연맹)	3백 49만	6백 69만	3백 20만
유엔인도주의사무국(UNDHA)	3백 76만	7백 63만	약 3백만*
미국			3백만 이상

* 유엔인도주의사무국에서 조사한 부족량은 한국·일본의 지원 및 타이로부터의 수입량 80만톤을 뺀 것임.

안기부법, 재개정되어야

1. 안기부는 국제사회 활동에 주력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1. 안기부는 미국의 CIA와 FBI 같이 국내의 국방, 안보 관련 고급부분과 해외 정보권만 갖고 있어야 한다.

1. 내국인 수사권은 검,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보권과 수사권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1. 안기부의 국내 민간부분 사찰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1. 안기부의 예산은 그 용도가 분명하게 보고되고 활동과 결산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안기부의 해외정보 강화를 위한 양성과 예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간첩죄는 형법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안기부 수사권 폐지 운동 신문 광고를 위한 모금

개정 안기부법에 부활된 수사권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의견 광고를 한겨레신문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구좌 : 예금주 전준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안기부 피해.비리

고발센터

TEL : (02)3672-0251,2

FAX : (02)3672-0255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정보 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

녹두 BBS 회선 중설을 위한 일·일·호·프

일 시 : 4월5일(토) 오전11시-
밤 12시 (문의 : 232-9151)

장 소 : 레지스탕스(덕진 공설
운동장 맞은편, 일양병원 옆)



평화와 인권

제 6 7 호

1997년 4월 15일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문 만 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금정리 성지 사회관)
전화 : 0652-76-1253 / 팩스 : 74-7486 / ID : (천리안, 나우누리, 녹두비비) paulmun

기아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다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고자 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한겨레 신문 등에서 연재기사로 소개된 바 있는 북한 동포의 실상은 임산부와 아동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임이 밝혀지고 있고 각계 인사의 대국민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지원을 허용한 것도 이러한 현실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에 의한 것이지만 민간단체의 움직임은 이러한 정치논리를 뛰어넘는 평화적, 인도주의적 운동으로 전국민의 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전북지역의 상황도 이번 주를 고비로 이러한 전국적인 움직임과 함께 하면서 전 도민의 북한 동포 돕기 운동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등 시민, 사회단체는 총 모금액 1억원을 목표로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모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두 모금 활동도 벌여 낼 계획이다.

종교인 협의회는 24일 정계,

학계, 경제계, 언론계, 예술계 등을 총망라한 북한 동포 돕기 전 북본부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총화해 내기로 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도 '북한동포돕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8일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가두 캠페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전북지역 본부는 지역 본부 운영위원들의 결의를 시작으로 각 단위사업장 집행부 결의 등을 통해 민주노총 중앙 운영위에서 결정한 조합원 1명 4,000원 모금 운동 계획 등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모금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각급 단위 학생회가 전체적으로 참가하는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명 3,000원 내기 운동과 1주일간의 바자회 등을 통해 3월 15일 현재 1천 5백만원의 모금이 진행되었고 가두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단순히 인도적인 요구가 전부는 아니다. 황장엽 망명과 이한영 피살 사건 등으로 97년도의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시기에 전체 민중들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갈망을 표현해내는 전국민적인 '평화운동'으로 그 의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동포돕기는 우리의 의무

또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전문과 11조(사회권의 기본규정, 일반규정, 기아로부터의 자유) 등 여러 국제인권조약들이 북녘동포 특히 아동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북녘동포 돕기는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한민족으로서 '당사국'의 의무이기도 하다.

한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동질성에 기반한 평화에 대한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동포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평화와 인권

법륜스님 강연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에서 주최하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초청강연회'가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인 법륜스님의 강의로 24일 저녁 7시 동학혁명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인권 학교

[취재] 인권운동은 단지 일정한 시대에 주어진 인권을 지키고 구현시키기 위한 운동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의 참뜻을 추구하면서 지배 계급의 인권관(의지)과 맞섬으로써 끊임없이 '인권'의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나가는 운동이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인권'이란 생산관계에 의해 제약되는 지배 계급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1회 인권학교의 제3강좌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시민의 권리'를 주제로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서두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권 등 사회복지의 개괄적인 역사와 이론이 소개되었다.

한편, 4월 11일에는 '여성 인권의 현실 및 변화'라는 제목으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안혜성 연구부장의 제4강좌가 이어졌다.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가족내 여성인권 실태와 사회전반의 문제를 다룬 이 강연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고통을 인권학교 남녀 참가자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성폭력, 매매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남녀 성역할 규범을 시정하고, 남성의 일방적인 성욕충족을 당연시하는 매매춘문화의 극복,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을 실

시할 것과 함께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여기에는 제3강좌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

강연요지

사회복지정책과 시민의 권리

먼저 '사회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명확한 개념의 정의없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유포시켰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비판적 이성을 통제하기 위해 동원하였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용어도 지배세력의 이러한 의지와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 분명하다.

사회복지 개념을 규정하는 양대 관점으로서 산업사회론적 관점과 자본주의사회론적 관점, 그리고 이의 통합설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으로서, 자유방임적 경쟁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신보수주의적 입장인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시장의 결함을 사회복지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도우파의 입장인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책을 통해 평등사회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유럽 각국의 노동당, 사회민주당 등의 중도 좌파복지주의(Welfarism), 사회주의의 실현이 곧 복지상태라고 보는 사회주의(Socialism)적 사회복지정책 이념 등이 있

다. 봉건 사회에서 시민 사회로의 이행의 결과로 형성된 시민법은 추상적 평균인을 전제로 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지도원리로 하였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불평등과 빈곤은 더 이상 시민법 체제와 어울리지 못하여(시민법의 3대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인 계급의 대립과 빈곤의 심화 현상을 은폐하고 있다) 새로운 영역의 법질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등장한 법영역을 사회법이라 부른다. 사회법은 시민법의 지도원리를 수정한 것으로서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별된다.

인권의 형태는 시민자격과 신체 및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권으로부터 보편적 선거권을 토대로 하는 참정권, 그리고 자본주의적 모순으로부터 인간의 생존을 보호하고 보장하려는 사회권으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이러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유권조차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각종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조직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을 매개로 할 필요가 있다. 법이 지배자들만을 위한 수단인 것이 아니라 사회법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법을 통해 권리를 확인하는 소송,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법률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연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강희남목사 석방 대책위 결성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통일운동에 앞장서다 구속된 강희남(78) 목사 석방을 위해 전북 도내 23개 사회운동 단체가 대책위를 꾸려 발벗고 나섰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민주노총전북본부, 천주교 정의구현전주교구 사제단 등 도내 23개 재야·사회·종교단체는 지난 4월 7일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원회(상임대표 고민영·전주 임마누엘교회 목사)를 결성해 조직적인 강목사 석방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강목사는 76살의 고령에도 불

구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95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됐다.

77년 유신정권에 맞서 투쟁하다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이번이 네번째 옥살이다. 고령에다 지병까지 도진 강목사는 현재 군산교도소 병동에 외롭게 수감돼 있다.

강목사는 1년형기를 모두 끝마친 상태다. 하지만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조문파동과 관련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구속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는 99년 1월에야 석방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결성선언문에서 "실형만기를 다 채웠는데도 조문단 사건을 이유로 병약하고 늙은 강목사를 계속 쇠창살 아래 가두는 행위는 목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도적인 처사"라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도 사법적 틀에만 맞추지 말고 하루빨리 강목사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엠네스티인터내셔널 등 인권단체와 연대하고 서명운동, 청원 등 가능한 물리적·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목사 석방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매주 목요일마다 소속 단체가 돌아가며 강목사를 면회하고, 영지금 모으기, 엽서 쓰기, 석방기도회, 국가보안법 철폐 강연회 등을 열고 후원의 밤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수 진태윤씨 운명 26년 복역 88년 출소

장기수 진태윤(76)씨가 4월 2일 새벽 1시 40분 전주 영동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운명했다.

진씨는 20년 함남에서 태어났으며, 62년 3월 다른 5명과 함께 남파되어 63년 4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서대문, 대전, 전주교도소 등에서 26년간 복역했다. 88년 12월말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 후 출공 전주 완주군 구이면 대덕리에서 생활해 왔다. 슬하에 자녀로는 북한에 진양만씨가 살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시민회 언론학교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내세우며 활동해온 전주시민회(공동대표 양해관·신양균)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네 번째 언론학교를 연다.

첫날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공동대표 정동익씨가 '한국 언론의 역사'를 주제로 강의하는 등 김종철(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동영(국회의원), 김명곤(영화배우)씨 등이 강사로 나선다. (0652) 231-9628

제1회 인권학교 계속됩니다.

- 총 6 강좌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장 소 : 숲정이 성지 사회관
- 5강좌 : 노동인권의 현황과 과제
- 강 사 :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 6강좌 : 언론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시민의 권리
- 강 사 : 정동익 (아침출판사 대표)

정기구독 안내

전북은행 : 535-21-0027850 국민은행 : 506-21-0876-764
우체국 : 402297-0053040 농협 : 508-02-053278
예금주 : 전주형

미공군기지 공여토지 소유권 분쟁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 -

정부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한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주한미공군의 권리주장이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 권리분쟁이 되고 있는 문제의 지역은 군산시 옥서면 미공군기지 정문앞을 비롯한 주변 40~50만평에 이르는 토지이다. 당초 이들 토지는 현 미공군기지와 함께 한미행정협정(1967년) 당시 정부가 미공군측에 공여했던 토지의 일부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미공군측은 이 일대에 부대기지를 건설했으나 일부 토지가 남아 기지 울타리 밖으로 남겨졌고 그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당시 정부는 토지를 공여하면서 기지 울타리내 토지는 보상을 통해 매입, 미군 측에 임대한 반면 울타리 밖은 후속조치가 없이 방치해 원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 논란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간 별 탈없이 진행되어 왔던 이 문제가 이제서야 도출되는 것은 최근 <유>아람산업이 미공군기지 정문앞 부근 7,200평에 임대아파트 3개동 259세대 신축신청을 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일부 주민들과 아람산업측은 "선천 때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소유주도 모르는 사이 미군에 공여됐다"면서 "정부가 사유재산을 공여한 것으로 소유권은 있으나 권리는 없는 등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발이 거세자 시는 뒤늦게

부라부라 국방부에 문의하는 등 소동을 피웠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단지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측과 신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의중이라고 할뿐 속 시원한 답변은 내리지 못한 채 양측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 공여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토지의 상당부분이 주민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23조 '재산권보호' 조항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서 사유지를 징발하는 것은 적법한 법률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보상을 치루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군공여지, 기지는 미군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군 소유의 토지가 아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군이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협의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토지 소유주와의 계약 등 다단계의 협의를 거쳐 주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상황과 반대이다. 1) 적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 소유주에 대해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았으며 3) 땅 소유주와 해당 관청이 공여 사실을 제대로 아예 모르고 있다.

권리의식의 부재를 탓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한미행정협정)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는 안보의 논리 앞에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인권의 역사

"인간은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루소(J. J. Rousseau)가 프랑스혁명 전에 발표한 유명한 [사회계약론](1762)의 서두에서 한 말이다.

일본의 법학자 스기하라 야스오는 '92년에 지은 [인권의 역사](한울, 1995)에서 인권의 역사를 13세기의 '자유대헌장'(Magna Carta Libertatum)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편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그림자'로서 성에 의한 차별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평균수명의 저하, 정부의 사태 방지 등 '자유방임'체제의 현실을 분석한다.

저자는 인권의 역사를 현대 시민헌법에까지 확장하고 21세기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과제로서 민주주의의 강화와 외국인의 인권보장, 여성의 차별의 문제, 어린이의 인권 문제, 기타 평화적 생존권, '프라이버시의 권리'(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통제하는 권리)의 보장 문제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평화, 군비축소, 인권, 민주주의 이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저자는 법학자로서 근대와 현대의 시민헌법을 구체적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저자가 인권의 역사를 민중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평화와 인권

제 68호

1997년 5월 1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문만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숯정미 성지 사회관)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ID: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

도내 북한동포 돕기운동 활발

'(가칭) 북한동포돕기운동 전북본부' 결성 앞뒀

지금 전북지역 곳곳에서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이 범도민적인 호응 속에 전개되고 있다. 전북지역 계단체가 총망라하여 (가칭) "북한동포돕기운동 전북본부"를 결성을 위한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하여 생명에 대한 사랑과 순수한 동포애를 확인하고 대대적인 모금운동에 착수하였다. 교과를 초월한 모든 종교계, 법조인, 언론종사자, 교육인, 의료인, 정치인, 여성운동가,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칭) "북한동포돕기운동 전북본부"는 5월 7일에 운동본부를 창립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북한동포돕기운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화신부: 76-1253)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주중앙성당 앞에서 북한동포를 위한 거리모금 및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소속 단체들은 모금운동 개시 3주만에 5천만원에 가까운 액수

를 모금하는 등 전북지역의 활동은 전 도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십, 수백만의 동포가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을 생각할 때, 평화를 사랑하고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들의 한뼘, 두뼘 모은 정성이 북녘의 동포들에게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은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체계적인 노동자 교육, 왜 필요한가?"

전북노동교육원추진위/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포럼

"노동자다운 노동자, 인간다운 인간을 향한 노동교육의 일보전진"을 표방하고 있는 <전북노동교육원추진위(대표 문정현, 김의수, 염경석)>의 활동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9일에는 <추진위>와 <민주노총 전

북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이 열렸다. "체계적인 노동교육,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추진위 위원이자 호남사회연구회 산업노동분과장인 이성호씨가 발제자로, 고종승 병원노련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40여명의 노동자와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추진위 공동대표인 김의수(전북대 철학과)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가 기회"라고 진단하고 "한국의 노동자가 노동자다운 노동자, 인간다운 인간으로 주체화되는 데에 노동교육원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96, 97년 총파업 이후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과 노동자의 사회정치세력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짚어준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동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동교육은 매우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제 107주년 노동절 기념 주간 사업으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전북노동교육원추진위>와 공동으로 준비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권 학교

[취제]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과 <정의평화정보센터>가 함께 연 제1회 인권학교의 다섯번째 강좌와 여섯번째 강좌가 열렸다.

'노동인권의 현황과 과제'(5강좌)에서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은 노동자가 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변방세력으로서 소외되어 있으며 시민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도 노동인권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익 아침출판사 대표는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6강좌)에서 권력 중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진단하고 시민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 6강좌가 마감됨으로써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제1회 인권학교의 모든 강의가 끝난 셈이다. 한편, 인권학교 수료식은 5월 2일 저녁 7시에 치러진다.

5강좌

노동 인권의 현황과 이후 과제

기본적 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확장되어 왔다. 인권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의 개념도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회의 절대다수이고 우리 사회

의 중요 축의 하나이다. 또한 노동인권의 보장은 "약한 지위의 노동자의 보호"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실질적 토대 구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선진국이라는 게 무언가? 임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다. 곧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는 사회이고 노동자계층이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노동권, 양비론/양시론 아닌 정의의 문제

우리나라 노동법 변천과정의 특징은 첫째 노동법은 정변 때마다 개악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정규입법기관(국회)이 아닌 비정상 기구에서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최초로 노동법이 제정된 것은 1953년 한국전쟁 중이었다. 이때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되었고, 이 노동법은 비교적 노사자치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최초의 이 노동법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았던 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효율적인 전쟁 동원을 위해 노동자를 달랠 필요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노동법은 그 뒤 계속되는 개악의 역사를 거치는데, 그 첫째가 5.16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된 노동법이다. 이때 특히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배제하는 등의 대폭 개악이 이루어졌다. 그 뒤에도 10월 유신 직후 '비상국무회의'의 개악과 5.17 친위쿠데타 직후 소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최악의 개악이 이루어졌다.

사실상 최초의 정상 국회에서

개정된 노동법은 1989년 여소야대 국회의 노동법이다. 그러나 당시 노대통령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행사'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폐지된다. 관료독재를 견제할 유일한 세력이 공무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노조의 결성은 여전히 노동자 운동의 주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총파업과 범국민적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1996년 12월 26일의 날치기 개악 이후 노동법은 지난 3월 10일 여야 합의에 의해서 다시 개악된다. 합의개악된 이 노동법은 '상급단체 복수 노조 허용' 외에는 대부분 자본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자는 총파업이라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전쟁에는 승리하지 못한 셈이다.

노동자, 시민권 회복해야

그렇다면 노동법 개정의 올바른 관점은 무엇일까? 노동법은 먼저 군사독재잔재를 청산하는 관점에서 개정되어야 하고 노동권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사회적 시민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하청기업)의 노동자,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서비스직, 판매직 노동자들, 그리고 학습지 교사, 가내노동자, 보험영업 노동자 등 한계노동자층에 대한 집중적 보호와 지원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산업별 노조 건설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상 아닌 엄연한 인격 주체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하여 이듬해 11월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 수는 190개 국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지닌 국제인권조약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 20일 이 조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으며, 조약 44조 1항 "조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그 후 5년마다 조약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에 따라 94년 11월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조약은 당사국에 몇 가지

중요한 의무를 과하는데 그중 하나가 '(당사국 정부는)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을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널리 알려야 한다'(42조)는 것이다.

만 18세 미만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약 40개 조항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리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 문헌은 결코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막연한 '선언'이 아니라 어린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국가를 구속하는 '조약'인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주요내용

<1부> 1조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4조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모든 입법, 행정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7조 이름, 국적을 가질 권리.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12조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갖는다./13조 표현의 자유,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 전달할 권리/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5조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24조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2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32조 경제적 착취 및 신체, 심리, 정신, 도덕적, 사회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34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35조 아동의 유괴,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인 조치/37조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아동에게 사형 종신형 금지.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40조 형사피의자, 피고인, 수인이 된 아동의 존엄 존중. 형사소송 절차의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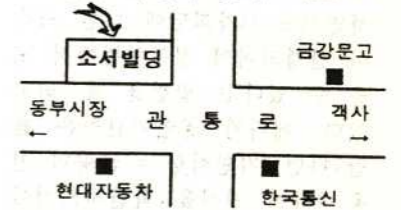
정부가 유보한 조항들- 제9조3항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권/제21조 가항 아동의 입양에 대한 당사국의 허가 보장권/제40조2항 나호 5 형법위반의 경우 공정한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

전북 여성의 전화 사무실 이전

'전북 여성의 전화'(83-9855)가 사무실을 옮기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 여성의 전화' 신혜수 회장과 '성폭력 예방치료센터'의 박상희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 여전'의 신회장은 기념강연에서 여성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전북 여성의 전화'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 여성의 전화' 약도



제 107 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일시: 1997.5.1(목) 오후1시 30분
장소: 전주체련공원(동물원 앞)

제 1 회 인권학교 수료식
일시: 1997. 5. 2(금) 오후 7시
장소: 숲정이 성지 사회관

조성만 열사 추모미사
일시: 1997.5.15(목) 오후7시30분
장소: 전주 덕진 성당
주최: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전북 여성노동자회 창립총회
일시: 1997. 5. 16(금) 오후 2시
장소: 익산 창인동 성당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금석이다.

최근 공안당국은 한총련대책 회의를 좌익사범대책회의로 확대개편했다고 한다. '남침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황장엽 망명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이같은 조치는 정권차원에서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공안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게 한다.

한편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돕자는 운동에 대해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말리지는 못하면서도 '4자회담에 대한 약속이 선행되어야 정부차원에서 도울 수 있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공안기관들은 틈만 나면 '지원식량 = 군량미 전용'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말을 믿고 있다.

굶주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남한정부

남북한이 대치해온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력침공'의 신화에 억눌려 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울리면 우리의 모든 '자유로운 사고'가 정지되어야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왔다. 이 때, 북한동포는 언젠가는 만나야 할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 증오스러운 '적'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동포들이, 굶주려 100만이 죽네, 200만이 죽네 해도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열의를 갖고 돕기운동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정부가 4자회담을 북한 동포돕기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굶주림의 정략적 이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남한 정부는 4자회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시기 한반도의 위기는 오히려 식량문제이다. 북한의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계속 긴장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미국, 중국, 남한이 4자회담에 찬성하고 있고 북한도 4자회담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만 남한정부가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으로 4자회담수용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4자회담수용을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는 것은 국제 여론상으로 전혀 유리하지 않다.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인도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만이 모여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식량지원의 '양'이 문제인데 일부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식량부족'이 현실이기 때문이며 또, 요행히 국제적 지원과 남한 국민들의 도움으로 올해에는 북한이 '대량으로 굶주려 죽는' 사태를 넘긴다 하더라도 결국 유실된 농토와 생산설비, 비료 등 기본적인 생산력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도움으로는 해결

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 간의 식량지원과, 장기적으로는 생산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는 것이다.

절실한 "평화운동"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돕지 않는다면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운동에 더욱 열심히 나서야 한다. 그러나, 식량지원운동에만 나서는 것으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근본문제는 남북한의 군비의 문제이다. 사실 북한의 식량문제는 북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군비지출을 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남한과 미국의 군사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날로 군비가 증강되는 남한의 상황 - 12월 26일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되었고 1997년 정부 예산에서 국방예산은 12.8% 증액되었다 - 이 무리하게라도 군비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북한정부를 내몰았던 것이다.

군비축소로부터 장기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력을 남북한 모두 20만 이하로 줄여나가 비용을 줄임으로써, 북한은 유실된 농토를 복구하고, 종자를 개량하고, 농기계를 확충하는 등 식량문제 해결에, 남한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하며, 남북한 국민 모두가 서로의 침공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평화운동'이 절실하다. 통일운동이 그 가슴 한편에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평화운동'에는 '인류의 공존'이라는 따뜻한 인류애와 냉철한 이성이 숨어있다. <평화와인권>



평화와인권

제 69 호

1997년 5월 17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문 규 현

편집인: 문 만 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송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ID: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5.18 열사정신, 돈으로 바꿀 수 없다 17주년 광주민중항쟁을 기리며

1977년 5월 18일은 그 전년도와는 다른 색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5.18 광주민중항쟁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이날을 기리게 되어, 그 동안의 민간차원의 행사를 넘어 온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되는 등 자못 기대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국가 차원의 5.18은 국민들의 정서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여전히 과제

정부는 5.18 관련자로 사망 154명, 부상 2737명, 구속 482명, 행방불명 3421명을 구분하여 국가유공자 추진을 기본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5.18의 희생자들인 전두환, 노태우 등 일당들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 운운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실상이 점차로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5.18 민주영령 앞에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5.18의 기본적 관점은 군부독재의 쿠데타를 통한 정권 탈취에 맞서 민중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중사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일당들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화살의 만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민중 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쓰러져 간 영령들의 명예회복은 필수적인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전북대의 이세종 열사, 원광대의 임군수 열사 등이 공수부대의 군화발과 총탄에 쓰러져 갔는데, 이분들의 위패를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하는 것이 순리일 텐데,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논리 사면은 반역사적

전국적으로 5.18 민중항쟁동지회가 결성되어 많은 성과들을 일구어 내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계승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그 책임자들을 완전히 처벌하고 국민들의 심판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그 동안의 진상규명 노력은 미흡하

기 그지없다.

국민의 정서를 의식하지 않고 약간의 처벌을 받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등의 사면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운하는 것은 국민적 기만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중투쟁의 자양분되어야

더불어 국가유공자로 추인되어 정부로부터 몇 푼의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 그 분들의 명예를 분명히 보상하여, 국가가 모든 유족들의 생활을 책임질 방안과 5.18 피해자 및 부상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로서의 약간의 보상금은 생생내기에 불과한 알파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은 남한 현대사에서 절대적인 위치로 자리잡아 왔다. 5.18 정신이 계승되어 87년 6월국민대투쟁이 이어졌고, 97년 노동자투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민중투쟁의 자양분으로 이어질 것임에 분명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차례가 아닌 진정한 열사정신으로 살아 오는 17주년 광주민중항쟁이 97년에는 벌어질 것인지... (평화와인권)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1.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81년 컴퓨터로 처리된 신분증명이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미국 역시 카터, 레이건, 클린턴 행정부 모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증명제도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91년 뉴질랜드 정부가 키위카드라는 부문별 주민신분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결국 카드시행 계획은 포기되고, 의료혜택 목적의 카드만 만들어졌다.

2. 불편은 여전하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매년 약 3백만 건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 분실로 인한 불편함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집에서 쉬는 게 낫다. 전산시스템이 고장나면 병이 나도 참아야 한다.

3. 엄청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결국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4. 당신의 비밀은 공개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한 장에는 그 사람에게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엄청난 수의 관계자가 중앙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체계를 세우더라도 수만대의 컴퓨터가 중앙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어 개인의 자료가 어디에서 유출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만다.

행정전산망은 한달에 5백여건 이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도 하는 등 결코 안정된 전산망이라 할 수 없다. 행정망뿐 아니라 국가전산망이 전체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융망, 증권전산망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사전에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도내, 전자주민카드 반대 움직임 활발

- 각 사회단체 모여 6월 4일 공청회 열기로 -

제주도가 다시 한 번 역사의 비극적 시험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서울, 부산 등의 도시에 이어 전북도내에서도 전자주민카드 시행 저지 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자주민카드 시행 저지 운동을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확장한 바 있는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INP)을 비롯한 전주시민회,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전북대학교 정보통신단, 정의평화정보센터 등이 이미 전자주민카드 반대를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준비해 놓고 있고, 민주노총 산하의 보리식품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별도로 참가할 의사를 밝혔으며, 전북 환경운동연합, 전북 시민운동연합, 참교육 학부모회,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도 금명간 참가의사를 밝혀 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전자주민카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부족하다고 보고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공청회는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김기중 변호사를 주발제자로 하여 6월 4일(수) 저녁 7시에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에서 열기로 하고, 공동대책위원회로 모색도 사태의 추이를 보아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평화와 인권>

"모든 것 초월해 북한동포 돕자"

- 북한동포돕기운동 전북본부 창립 -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단체가 도내에서 결성되었다. 이미 지난 달 '종교인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북한동포돕기운동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는 도내 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거쳐 지난 7일 창립총회를 가진 뒤 "북한 동포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실상에 대해 함께 아파하며 사상과 이념, 정견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순수한 인간애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 동포를 도와 민족화해와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공식 발족했다.

각계 각층의 도내 인사와 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는 '전북본부'는 도내에서는 최대 규모로 만들어진 각계의 연대기구로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의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창립 첫날까지 이미 1천 8백만여원을 모금한 '전북본부'는 모금의 원칙으로써 ① 통로자율원칙 ② 운영분리원칙(운영비총당 배제) ③ 모금 및 전달의 공개와 합법적 절차 준수 등 세 가지의 모금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창립대회 뒤에는 전동에서 중앙성당까지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97년 주요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

- 2월 25일: 부산지역 빛나는전망 사건 (3명 구속)
- 2월 : 학생연대 회원 5명 구속
- 3월 18일: 시민청 회원 1차 구속 (14명)
- 3월 24일: 전주대 단기동맹 사건 (4명 구속)
- 4월 4일: 전국학생정치연합 회원 8명 구속
- 4월 7일: 상지대 21세기 프롬메테우스 사건 (3명 구속)
- 4월 10일: 시민청 회원 2차 구속 (6명)
- 4월 11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회원 (5명 구속)
- 4월 15일: 대학가 서점대표 3인 구속
- 4월 23일: 노동정치연대 회원 4명 구속
- 4월 24일: 서울대 학생연대 회원 13명 연행

*4월 말까지 상황입니다.

여성노동자 인권 확보와 평등사회 수립을 위하여 -전북여노회 창립식 가져-

전북 여성노동자회(0653-51-2453)가 발족되었다. 16일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한 전북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인권 확보와 평등사회의 수립을 표방하고 '여성노동자선언'을 채택했다.

<여성노동자선언>

여성노동을 주변화시키는 임시직 확대 반대에 앞장서며 4인 이하 사업장,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에 관한 운동에 앞장선다. / 산전후 휴가 90일, 임신중 태아검진 휴가, 유급유산휴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확보 운동과 모성보호 비용에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 유급육아휴직제도 확보 운동, 직장보육시설 확대와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노동법 개정운동에 앞장서며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규제 강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및 민주적 관리운영 등 사회개혁운동에 앞장선다.

<평화와 인권>

행/사/안/내

성폭력 추방 결의대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대표 박상희, 83-9647)가 주관하는 성폭력추방결의대회('성폭력 없는 밝은 세상을 위한 온가족 걷기대회')가 전북여성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 주최로 17일 오후에 열린다. 이 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덕진구청강당에서 결의대회와 '지킴이' 발대식을 마친 뒤 객사까지 '온가족 걷기대회'가 이어지고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정기구독 안내 - 예금주 전 준 형 -

전북은행 535-21-0027850 우체국 402297-0053040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밝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박 상 희(성폭력에방치료센터 대표)

우리나라에는 왜 성폭력이 많은가? 우리나라 성폭력의 발생률은 세계 제2위(실재 발생률 20-25%만 신고)로 매해 10만명씩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신문사회면에는 여중생 40명중 1명이 성폭행 피해의 충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전체 여성의 35.9%가 성폭력, 성희롱을 경험했고 청소년의 성폭력 경험자들 중 60% 이상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다.

사회통제로서의 성

오랜 유교적 전통 하의 가부장적 성규범과 이중적 성윤리를 사회의 관습과 관행으로 내려와 상적 불평등구조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순결해서 남성의 혈통을 전승, 재산을 상속해 줄 가장 확실한 적자를 생산하기 위한 생식기능으로 허용되었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성, 그리고 사랑을 출발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쁨의 성보다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절을 강조하게 되었다. 결국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성의 추구인 성의 쾌락을 죄악시함으로써 어둠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건강한 교육과 이해의 과정없이 도구화되어갔다.

반면 남성의 성은 혼외성생활의 자유를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축적이나 매음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매매음의 경우에도 윤락여성만을 주로 체벌하게 되어

즐기는 성으로 대상화시켜 왔다. 결국 가부장제하의 결혼은 남성에게 여성을 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셈이 된 것이다.

성개방과 성자유화는 성을 행위의 성으로만 정의하여 왜곡된 성이해가 판을 치게 되었다. 특히 향락산업이 40-45만개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성산업종사자는 120-150만에 이르며 이는 15-19세 여성 650만의 1/5에 해당된다. 또한 대다수 제조업에 종사하던 여성까지 향락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직장인, 학생, 주부까지도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산업현장으로 빠져 들고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제작되는 향락매체들의 범람은 올바른 성인식을 저해하는 교육자재로 이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기반을 통해 성폭력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나 통제기능의 약화는 사실상 성폭력을 방조하는 셈이 되고 있다. 더욱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침묵과 낮은 신고율로 소극적 대처를 조장하고 있으며 성폭력이 특정 범주의 인물에 의해 우발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편견이 있다. 또 수사관행이나 통념에 있어 피해자의 정숙치 못한 행동을 질책하고 피해여성에게 "유혹했지"라는 식의 추궁식 수사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피해여성을 만든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성폭력 피

해에 대해 담담하게 그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3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받아본 일이 있느냐고 했을 때 2%만이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그것도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일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성교육 의무화 · 여성권 회복

이처럼 우리사회의 성교육의 부재는 잘못된 성이해(향락문화와 왜곡된 매체)를 사실적인 성으로 이해하므로 건강한 성이해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우리나라의 향락문화의 범람과 거대한 자본주의의 물질우선 위주의 사회 가치관은 정의보다는 최대의 이윤을 위해 여성의 소중한 몸이 상품의 부속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가부장제하에서 이중적 성규범과 성윤리는 여성의 삶과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계중심적 구조와 가치관으로 유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제 우리는 성에 대한 편견과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성교육의 의무화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자녀, 부모, 사회(학교)가 되는 일과 향락문화의 척결로 건강한 사회의 성문화와 오락이 정착되어야 하며 나아가 남녀가 평등한 새시대 새질서를 통해 모두에게 열려있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문화제도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와인권

제 71 호

1997년 6월 18일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문 만 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③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숲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 0652-76-1253 / 팩스 : 74-7486 / ID : (천리만,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전자주민카드, 민주주의 기본 흔든다

전자주민카드 반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

도내에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리고, 그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6월 4일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대책위 준비모임>(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외 13개 단체)은 원불교 전주교구청 강의실에서 70여명의 사회단체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를 열었다.

행정부통제 강화, 권력분립 무력화

김기중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는 주발제를 맡아,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시스템 강화는 힘의 균형을 파괴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신분증제도와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국가의 수중에 절대권력을 부여하여 전자감시사회를 앞당기는 셈이 된다. 또한,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듯, 우리나라는 사람의 몸속에 컴퓨터칩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해야

이어서 김승환 교수(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는 전자주민카드에 우리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이고, 제10조의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방기이다. 또, 헌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형해화(形骸化)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토론자로 참가한 조문익 교육선전국장(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은 "전자주민카드를 정점으로 하는 '정보화'는 재생산의 위기에 처한 현대자본주의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전략의 필요조건"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

가보안법, 주민등록증, 사규, 블랙리스트, 정보통신법 등으로 이어지는 노동통제장치의 변화과정"에 놓이는 전자주민카드는 "좀더 교묘해지고 더욱 강화된 노동통제방식"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공동대책위 구성될 듯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주지회의 김완자 회장이 만약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면 발급 거부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고, 정의평화정보센터 INP의 임창현 단장은 전자주민카드가 감시와 통제, 그리고 도용 등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범죄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내에서는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본격적인 시행반대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기 사회복지 학교

▶지방자치시대 - 사회복지◀
97. 6. 20 - 6. 27

장 소 : 숲정이성지 사회관 강당
참가비 : 2만원(학생 1만 5천원)
주 최 : 정의평화정보센터

(세부일정은 3면 참조)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발제문 요약

왜 도입되어서는 안되는가

첫째, 민주주의의 기본권리에 위배된다(1면 기사 참조). 더구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보장이 되지 않는 정보화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둘째,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체계가 전혀 없으며, 보안대책도 부실하다. 국가주도에 의한 전산화사업으로 인한 전산정보의 의미와 위험성, 프라이버시의 의미 등에 관해 국민의 의식수준이 턱없이 낮다.

셋째,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의 문제, 즉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에 중요한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제, 신분확인에 필요없는 여러 정보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전산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보안과 정보유출의 문제는 기술적인 보안대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안문제는 사람문제이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체계는 그리 안정적이라 할 수 없고, 부패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지도 못하다.

프라이버시권의 의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1890년 당시의 프라이버시권은 콜리(Thomas M. Cooley)가 말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a right to be let alone)로 이해되었다. 개인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권리는 출발한다.

197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Griswold 사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자기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개시(開示)하는 권리” 내지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하는 권리”로 파악하였다.

1983년 12월 15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국세조사법> 판결에서 “현대의 정보처리의 여건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은 개인정보의 무제한의 수집, 축적, 사용 및 유통으로부터 개인의 보호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정보통제권 내지는 자기정보결정권이다. 즉,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은 정보의 주체이지 정보의 부품 내지 정보의 객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 필요성

전자주민카드 도입으로 국가 권력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도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보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비밀이다. 이들은 새로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리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는 그러한 부담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둘째, 전자주민카드를 미래에 전자투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에 의한 장기집권, 장기독재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다.

셋째, 전자주민카드를 국가권력의 담당자와 재벌 사이의 유착을 가져온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안기부 등 모든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불법 또는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정정 추가청구권이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강도높은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주민카드와 노동기본권 침해

노동통제장치로서 ‘노동법’이 집단적 통제장치라면, 사규나 블랙리스트 등은 개별적 통제장치이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좀더 교묘해지고 더욱 강화된 노동통제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동시에 공장 노동통제로부터 사회적, 총체적 노동통제로 이행이기도 하다.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데 모으는 ‘개인정보의 집중화’, 집중된 개인정보를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정보흐름의 대량화’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자본의 노동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카드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통제장치에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구독안내 : 0652) 76 - 1253
후원구좌 : 예금주 전 준 형
■ 국민은행 506-21-0876-764
■ 농 협 508-02-053278

제1기 사회복지학교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 문규현 신부)는 6월 20일~6월 27일 1주일 동안 숲정이 사회관에 서 <사회복지 학교>를 연다.

사회복지 학교는 최근 시민의 새로운 권리로 승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를 지방자치시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권리의 식’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회복지 학교에서는 전북지역의 지방재정이 타 시도에 뒤떨어진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현 전북지역의 조건에서도 발전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어떻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살펴보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경제개발 논리에 주민의 복지가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조망하게 된다.

- 6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이인재(한신재 재활학과)
- 6월 21일(토) 오후 2시 30분 “지방자치조례의 의의와 개선 방향”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 6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사회복지 시설문제와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 이정운(참여연대 사회복지 특별위원회 정책부장)
- 6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지역주민 복지운동 / 졸업식” 백종만(전북대 사회복지학과)
- 장소 : 숲정이성지 사회관
- 【문의전화 (0652) 76-1253】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공청회 평가 및 이후 방향에 대한 간담회

지난 6월 4일 공청회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모색할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 단체들의 대표님 또는 전자주민카드를 담당하시는 분은 꼭 참석하셔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때 : 1997년 6월 23일(월) 오후 4시
- 곳 : INP 사무실(오거리)
- 【문의전화 (0652) 76-1253】

‘지방자치시대의 여성’

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여성들의 생활정치에 부응하여 환경 문제, 소비자 문제, 지역탁아와 같은 사회복지 문제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정치에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공개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 내용은 김영삼정권의 여성정책은 어떠했으며 그러한 정책들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생활정치에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등이다. 강사는 현직 여성위원으로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고영자 전북도의원이다.

- 강사 : 고영자 전북도의원
- 때 : 1997년 6월 28일(토) 오후 2시 - 4시
- 곳 : 익산한마음예식장(익산경찰서맞은편 외환은행 3층)
- 【문의전화 (0653) 51-2453】

“한총련 스스로 심판하게 하라”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성명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장 염경석, 38세)는 고 이석씨의 사망과 더불어 한총련에 몰아치고 있는 탄압의 회오리가 이제 사건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민주주의운동’ 일반에 대한 탄압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최근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총련사태에 대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이석씨 사망사건의 “당사자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한총련을 해체하겠다고 버리고, 그 근거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 두며, 나아가 이러한 사법행위를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87년 민주대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건설한 자주적 조직인 한총련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더구나 김영삼 정부가 “고이석씨의 죽음을 이용하여 공안탄압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곤경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기민한 대응은 전두환 노태우 검찰조사 과정에서나 김현철에 대한 부정비리 조사때와는 상반되는 태도인 데다, 언론도 ‘하이어나’언론이라는 별명대로 한총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껏 물어뜯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누구도 자주적으로 건설한 학생들의 조직에 대하여 학생들보다 먼저 개입하지는 말 것을 촉구했다.

6.10 민주정치개혁 선언

-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식 전북추진위원회 -

... (중략) 우리 경제의 위기는 현정부가 들어서서 더욱 강화된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크게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도 현정부의 정치권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고비용 저효율론으로 또다시 노동자와 국민대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법 개악을 통해 고용불안 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지극히 우려스럽고 잘못된 처사이다.

따라서 지금의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통합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총체적이고 민주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수립되고, 배제와 억압, 군림과 행태에서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와 경제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 더 나아가서 위기를 빚자하여 수구적 논의를 부활시키고 공안정국 조성 등 불순한 정치적 음모를 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욱 큰 잘못이라고 보며, 국민과 더불어 단호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민주주의와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도입하여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개입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민심수습도 경

제회생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보비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도 92년 대선자금의 조성내역에 대한 수사와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데 대한 정치적 책임과 아울러 국민과 나라의 운명이 정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직의 진퇴를 걸고 사심없이 사태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릇된 '정치적 해결논리'로 원칙적인 해결을 회피하고자 할 때는 엄중한 국민심판에 직면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현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논의는 현 사태를 호도하고, 또한 국가의 장래를 진정으로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성정치 세력간의 합종과 권력분점의 편의성이라는 정략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한다. 정치인은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적인 대선 판짜기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정치제도와 풍토의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점재벌 위주의 성장전략을 수정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재벌경제의 비효율성을 척결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부패한 정경유착구조의 근절을 위한 정치·경제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실명제를 완화하거나 경제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부 정책은 현실을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 국민의 노력을 배반하는 반역사적 기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엄청난 정경유착과 탈법적인 권력운용의 뿌리가 5·6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과에 대한 참다운 참회도 없는 이들을 사면코자 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재의 국가적 위기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는 평화적 민족통일이 은겨레의 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참상에 동포애와 인간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당국이 늦게나마 민간차원의 식량자원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이 문제는 결코 소극적으로 민간차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동포들의 아사를 막고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대북지원 창구 역시 더욱 확대·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입장에 입각하여 부패척결과 민주개혁을 위한 국민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세력의 폭넓은 단결을 실현, 새로운 개혁의 큰 흐름을 형성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참다운 민주개혁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97년 6월 8일
삼임대표 조용술 문정현 신삼식

노동 평화와인권

제 72 호

1997년 7월 7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문만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금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ID: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자본 앞에 한없이 온순한 노동법 AP 노동자 농성투쟁 ... 복직투쟁 아홉달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잇따른 복직판정에도 불구하고 AP(익산 소재) 노동자들이 사측의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절박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7월 5일 현재, 복직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복직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 맞은 편 보도에 천막을 치고 이레째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노위 판정 불구 '버티기'
기아그룹(회장 김선홍)의 자회사인 AP(대표 김화순)는 지난해 4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야기된 노동자들의 파업에 당시 도지사의 중재를 노사 양측이 수용, 파업이 종식되었는데도 곧바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었다. 회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당시 노동조합(위원장 권태준) 간부들을 고소했다. AP 노동조합은 비대위를 구성해 수배상태에서도 조합활동을 계속하며 투쟁했고, 사회단체들도 <AP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위원장 문정현 신

부)를 꾸려 노동자들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지노위와 중노위는 각각 협약에 따라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자행된 회사측의 일방해고(96.12)를 부당해고로 인정해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5명의 노동자들에게 대한 복직판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회사측의 정신교육을 거부한 두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현재 중노위에서 복직여부를 심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대의원인 이석만씨가 사장과 언쟁을 이유로 패심죄를 적용받아 해고되어 전체 해고노동자 수는 8명으로 늘었다. 이들 세 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도 역시 징계위원회의 소집없이 이루어졌다.

이석만씨에 대한 해고의 경우, 새롭게 구성된 노동조합 집행부가 올해 들어 조합원 징계 권한의 일부를 사측에 넘겨주는 하였지만, 여전히 노조간부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노사가 반드시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 사항에 대한 명백

한 위반인 셈이다. 결국 회사측이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면서도 중노위의 판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계속하는 것은 '노동조합 강경파의 현장복귀와 그로 인한 조합원들과 접촉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장기간의 투쟁을 유도하여 해고노동자들의 생활을 압박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파업 당시 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일했던 박성준씨는 실제로 해고노동자들은 "온종일 노가다를 뛰고 또 다시 복직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해왔다"며 "우리는 여기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있으나마나 '노조법'
새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85조(구제명령의 확정)는 복직의무 이행 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중노위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 두고 있다. 전북 해복투에 따르면, 중노위가 그러나 '이와 같은 전례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노위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정 노동법 이후 첫 번째 법 적용이라는 전거가 되어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사회복지, 시민관심이 관건

‘정의평화정보센터 제1기 사회복지학교’ 결산

국가 책임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논의가 지역 조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운동으로 정립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제1기 사회복지 학교 “지방자치시대-사회복지”가 6월 27일 강좌 “지역주민 복지운동”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사회복지 학교에서 강사들은 시종일관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실현은 지방자치제도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 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은 과거 70년대 개발독재의 결과로 빚어낸 성장중심의 주민복지 퇴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현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 최소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개방, 비영리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등 1차적인 책임권자인 국가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국가 책임론”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회복지학교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지역사회의 과제와 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수반해야 하며

둘째, 지방들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차등적 배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복지의 형평성을 마련하는 일과 셋째, 시설에 대한 국가보조의 증대 요구와 함께 민간복지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무원의 전문직화가 필요하며 넷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제정에 하루빨리 착수하는 것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성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우이웃돕기나 자원봉사운동으로 좁게 해석되어 왔던 사회복지부문에 대해 전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으로 지역복지운동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북지역의 취약한 재정 자립상태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회복지 학교에는 사회복지사, 대학생, 시·도의원, 시민 등 각기 다양한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였고, 앞으로 계속될 후속모임을 통해 자치시대-사회복지의 과제와 대안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례 제정 연대

기구 만들자

주민참여, 주민권리실현을 위한 제도 필요성 절실

지방자치 발전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이다.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하고 관찰시키려는 노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뿌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는 욕망만으로 되지 않는다. 참여의 통로를 이해했을 때 가능한 것이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집행하는 것이 자치정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주민권리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주민참여·주민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민단체들에 ‘조례제정 연대기구’ 건설을 제안하였다. 더 많은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지방에서 창의적으로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통해 진정한 시민의 생활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회적인 기능보다는 구체적인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은 물론이다.

(정의평화정보센터 생활인권 담당 김 종섭)

구독안내 : 0652) 76 - 1253
후원구좌 : 예금주 전 준형
■ 국민은행 506-21-0876-764
■ 농협 508-02-05327

만도기계 노조 총파업

단협 39차례, 회사 ‘어렵다’ 일관

만도기계노동조합(위원장 김창한)이 97 단협 교섭결렬로 6월 26일 오전 10시 전면파업투쟁에 돌입했다.

만도기계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단체협약 교섭에 들어가 현재까지 6개월여 동안 무려 39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쟁의행위를 결의한 이후에도 만조기계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투쟁을 자제하며 교섭에 임했으나, 사측은 ‘경영이 어렵다’로 일관하면서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아직까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노동시간 단축 등 단협 17개 조항이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광주학살 관련자 서훈박탈 축소기도

[편집자주] 지난 달 26일 국방부는 12.12쿠데타와 5.18광주학살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77명 가운데 정호용, 최세창씨에 대해서만 서훈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각계의 견해 중 아래에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성명을 요약 소개한다.

“국방부는 국가방위부인가, 국가변란자 방위부인가?”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의 학살만행이 아니라 역사에 얼마나 깊은 음영을

드러냈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하건대 국방부는 김영삼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못해 신군부일당 모두가 처벌되지 못하게 된 데 한술 더 떠서 이제 5.18특별법을 최종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서훈법’에 의하자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아니라 기소만 되더라도 서훈이 박탈가능케 되어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는 당시 신군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77명 가운데 12.12 및 5.18관련자 중 대법에 의해 최종유죄판결을 받은 자·광주진압작전인 총정작전으로 훈장을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가운데서도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과 최세창(당시 특전사 1여단장) 등 단 2명만을 서훈박탈키로 한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국가안보에 대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서훈을 박탈할 수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전두환, 노태우야말로 12.12쿠데타와 5.18광주학살의 주역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2.12, 5.18 관련 서훈자 77명에 대한 모든 서훈을 박탈하고 역사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자세로 국방정책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비싼 혈세 써가며 패트리어트 미사일 몇 기 들여오는 것보다 국민들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때 국방부가 그렇게 주장해 마지 않는 국가안보는 몇 배 강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F학점 여성공약

김영삼정부 여성공약 이행 수준 미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5월 19일 “김영삼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발표했다. 여연은 김영삼 대통령 선거 당시 32개의 여성공약 실행수준을 조사 평가한 결과 9개 항목이 낙제점수 F를, 12개 항목에서 D, 10개 항목에서 C, 1개 항목에서 B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유일하게 B를 받은 항목은 “성폭력 예방 및 규제를 위한 법률제정”이었고, F를 받은 항목은 “시간제,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축진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를 제도적으로 지원”, “평등한 가정교육을 위해 부모 등 성인 대상 평등의식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 “대중매체 등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을 정화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여 여성과 자녀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미래 사회에 적합한 부모역할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사회교육을 강화”, “세대간 대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 “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주요 당직에 여성참여를 대폭 확충”한다 등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www.women21.or.kr

진보 죽이기-“잡아들이고 보자”

전북대에서만 대학생 20명 국가보안법 등 구속

한총련 사건 이후 불어닥치고 있는 마녀사냥식 공간광풍이 전북지역에도 예외없이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 달 25일 국가보안법 관련 대학생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연행사유나 변호인 조력권 등에 대한 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등 적법 절차도 무시했다. 집시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아닌데도 집회사진에 함께 찍혔다는 사유 아닌 사유로 학생들을 연행해 갔다. 25일 이후 현재까지 구속자는 18명이다.

한편, 경찰발표에 대해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사건 대책위> (위원장 소영현 공대 학생회장)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작된 사건임을 주장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경찰과 기무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간중시 이념은 주체사상과 다르며 한총련의 폭력시위를 반대하는 등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혁신대오 조직>에 대해서도 결성한 사실이 없고 <총학생회 후보 추대식>이 '조직구성'으로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구속자 전원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신장이나 검찰사기나”

검찰, 영장실질심사제 폐지추진

영장실질심사제(구속전 피의자 신문제) 시행 6개월을 맞아 검찰이 이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영장실질심사제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 뒤 영장 발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전북지역 청년학생 연대회의'가 주도한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간부 1명 등 2명이 구속되었고 영장이 기각되었던 2명은 재차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또 '연대회의'의장인 김중희씨 등이 수배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전북 인권선교협의회, 정의평화정보센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등 사회단체도 성명을 내고 행정권이 대선을 앞둔 정치공작과 공간탄압을 그만두라고 항의했다.

한편,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편파 보도를 일삼았다. 3일 기무사와 경찰청의 사건조사결과 발표가 있자 전북일보, 전라매일신문 등 지방일간지들은 수사기관의 발표문을 거의 베끼다시피하여 '지하혁명조직 적발'이라는 제하로 사회면의 주요기사로 사진과 함께 실은 반면, 학생들의 기자회견이나 각 사회단체들의 성명서 등 주장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피의자 직접 신문을 통해 그동안 있어온 수사기관의 일방적 조서작성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돼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구속납탈로 인한 인권침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뤼스 이리가레 (박정오 역)

나, 너, 우리

(차이의 문화를 위하여)

등문선, 1996

진정한 성의 해방은 여성의 대상화, 특히 여성의 상품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즉 페미니즘적 인식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리가레에게 페미니즘적 인식이란 우선 성적 차이의 윤리, 성별화된 권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에게 여성권은 인간의 권리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만의 독자적인 권리들이다. 여성권은 이제까지의 시민권과는 달리 '자유와 평등'의 권리라기보다는 자유의 조건으로서 '평등 속에서 차이'의 권리이다. 예를 들어 여성권은 평등한 임금에 대한 권리, 심지어 노동권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평등에 대한 요구는 여성을 해방시키는 수단으로서는 유도피적이다.

국내에서 이리가레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다. [나, 너, 우리]는 이리가레의 비교적 최근(1990)의 글로 이전 것들보다 쉽게 쓰였다. 그러나, 그의 지적들은 놀랄만큼 날카로운 것들이며 이론적으로 엄밀한 동시에 매우 실천적이다. 페미니즘을 통해 우리 사회 진보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발행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평화와 인권

제 73 호

1997년 7월 31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문만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561-0162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금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ID: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본격화 사회단체, 주민카드 반대 공대위 발족

전북지역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단체의 움직임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지난 7월 25일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문규현 신부)가 발족함으로써, 작년 이래 전북지역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오던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이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주민카드사업에 정보기관 깊숙히 개입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에서 발족한 공대위(상임대표 文奎鉉 신부)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위한 기획단을 해체할 것과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청 등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라북도 지사에게 전자주민카드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족식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전북 민주화 교수협의회, 전북 여성노동자회, 전북

시민운동연합 등 24개 단체가 망라하여 지난 5월 1일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 오던 반대운동의 맥을 계승하여 치러지게 된 것이다.

처음 INP, 정의평화정보센터, 전북대학교 정보통신단 등 3개 단체의 선전활동으로 시작한 반대 운동이 이후 2차에 걸친 간담회와 1회의 공청회(평화와 인권 71호), 그리고 수차에 걸친 집행위원회를 거침으로써 그 내용을 채워감으로써 이날 공대위 발족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근거법률부터 마련해야

한편 공대위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근거법률도 없이 시행하려는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대위는 3,400만개의 전자주민카드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전산망은 정부의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켜 정부에 엄청난 독점적 지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는커녕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관료

들이 밀실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더구나 근거법률도 제정되기 전에 전자주민카드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그 시행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함으로써 국회에서 통과되려 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깔보는 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

따라서,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과 아울러, 현재 신분증명에 수록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철폐하고 민간부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악습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전북지역에서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공대위가 결성된 것은 서울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는 세 번째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 의회와 전주시 의회는 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전북도에서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해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에 이미 1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심수 없는 세상 요원한가

최근 시국관련 양심수 폭증

지난 6월 한달에만 413명의 양심수가 구속되고, 올해 들어서 부터 7월 3일 현재 184일 동안 총 744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다. 월별 구속자수와 함께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수도 최근에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구속차의 급격한 증가는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집권 당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양심수 대량구속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88년 2.1명/89년 4.1명/90년 4.9명/91년 3.7명/92년 3.13명). 또,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총 3,606명이다.

최근 민가협(민중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발표한 <최근 시국공안 관련 대량구속사태와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3일 현재 구속된 양심수는 총 890명이며, 적용법규별로 볼 때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가 전체 890명의 49.3%인 439명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양심수는 30명으로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구속된 양심수가 57.5%인 512명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학생이 439명으로 49.3%, 재야 및 기타 117명

순이었다. 또한 장기수, 군경, 노동자 할 것없이 특정신분에 관계없이 많은 수의 양심수가 발생했다.

한편, 체포나 연행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중인 학생이나 시험을 치루던 학생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경찰이 대학 내에 등산객으로 가장해 들어와 학생회관에 있던 학생들을 잡아가고 권총으로 위협을 하며 체포하고 심지어는 짓밟이를 데리고 구속 중인 남편을 면회하러 간 부인마저 '긴급체포'하는 등 불법체포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김영삼 정부의 이러한 마구잡이 인신구속과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은 날치기 정국으로부터 한 보비리와 경제파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의 국정농란, 대선자금 공개 압력에 이르는 정권의 위기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불순하고 의도적인 호도책이라는 게 중론이다.

구속 피해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의 공통된 요구는 군사정권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다. "결사의 자유 보장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4면에서 이어짐) 결과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대표하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피청구인(당시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국회법 규정(본회의의 개의와 의사일정에 관한 제72조와 제76조)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에의 출석가능성을 배제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한국당 소속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그들만의 표결로 이 사건 법률들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회의 청구인들의 권한(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과 아울러 다수결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명백히 위반된다. (다음호에는 '2.결정의 의의'와 '3.결정의 문제점'이 실립니다).

▶ '미군부대의 민간항공에 대한 기지사용료 인상요구안'에 대한 시민포럼

일시 : 8. 12(화)
문의 : 군산연합(0654-42-5331)

▶ 사회단체 실무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 "형소법과 인권"

일시 : 8. 5(화) 저녁 7시
장소 : 전주 성광교회
문의 : 전북연합(0652-84-1067)

▶ 청소년 안전사고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안전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231-5768)>

구독안내:0652)76 - 1253

후원구좌:예금주 전 준 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 협 508-02-053278

정의실천시민연합 인권활동가 교육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시 : 8. 21(토) 오후 2시 - 10시, 8. 24(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주제 : ①인권의 개념과 새로 나온 시국/인권운동의 역할/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보장제도/인권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문제, ②국내인권현황과 정책 참여요기 국제적 사례를 중심으로

권총위협에 보복구속까지

검정, 농활 감시 항의하는 농민들 위협 끝 구속

농민회 간부들과 회원들을 경찰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3일 완주군 농민회 간부 및 회원들을 화산파출소 박현수 순경이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된 권총으로 위협하고, 7월 14일 불법연행하여 김생현(완주군농민회 조직부장)외 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여름 농촌활동을 벌이던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경찰에서 마을 이장을 통해 수시로 동향 파악하고 감시하는 것을 농민회원들이 파출소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이었다.

파출소 측의 농활 감시와 동향 보고 사실을 마을 현장에서 확인한 완주군 농민회 간부들이 파출소장 면담과 농활 감시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파출소에 있던 박순경이 총기 위협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입씨름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뒤 파출소장과 화산면 농민회 지회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파출소장이 총기위협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하고 사건이 일단락 되었으나 11일 후인 7월 14일에 경찰의 고소로 농민회원들이 연행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군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총기로 국민을 위협하고 오히려 편파수사로 농민들을 구속한 것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농촌활동을 위축시키고 농민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계획적인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완주군 농민회를 비롯한 전농 전북도연맹 본부에서는 완주군 경찰서에서 매일 항의농성과 집회를 가졌고, 기소를 시킨 검찰에 항의하는 검찰청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즉각적인 농민회원들의 전원석방과 공개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완주군 농민회 ☎251-5154)

전주교도소 장기수 단식농성

공안탄압이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가운데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들의 단식농성이 있었다. 교도행정 처우개선과 대학생들을 징벌한

것에 대한 항의하는 농성이다. 작년 8월 한총련 연세대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형을 살고 있는 이주형(전 대경총련 의장)씨 등 2명이 교도소 내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이를 저지하는 교도관과 다름이 벌어져 교도소 측의 징벌이 가해졌다. 이에 징벌의 부당함과 교도행정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허정길(15년 선고)씨 등의 장기구금 양심수들과 자주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돼 변호인 외의 일체의 면회를 제한받고 있는 미결구금 학생들의 단식농성이 벌어졌다. 이에 7월21일 오경숙(전북민가협 의장)씨를 비롯한 전북지역 인권단체 소속 5명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을 면담하여 정확한 진상조사와 교도소측의 해명, 그리고 빠른 해결의 약속을 받아냈으며, 교도소 측의 징벌과 양심수들의 단식은 해제되었다.

요즘처럼 더운날씨와 더불어 더 덥게만 느껴지는 공안탄압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문민정부 4년 "신농정" 심판 전농 전북도연맹 주최 전북농민대회 열려

지난 7월 8일 전주 코아 백화점 앞 팔달로에서 4,00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김영삼 정부 농정심판과 농축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위한 전북농민대회'가 열렸다. 김영근(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정책으로 한우, 양파 등의 농축산물이 엄청난 가격폭락을 일으켰으며, 정부의 잘못된 방향설정과 행정편의적 투자로 농민들만 죽이는 결과를 가졌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즉각 통합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식량자급을 이룩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생산비의 보장, 농지면적의 확보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랫만에 농민들의 강한 울부짖음에 지나가던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민주노총 전북지역 본부 염경석 의장도 강한 노동자 농민의 연대로 김영삼 정부를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집회를 마친 농민들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대국민선전을 수행하였다. <평화와 인권>

법률안 날치기통과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

김승환 (전북대학교수, 헌법학)

1.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1997. 7. 16. 국회의장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렸다. "피청구인(당시 국회부의장 오세응)이 1996. 12. 26. 06:00 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 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 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의 결정(1995. 2. 23. 90헌라1)에서 "국회의 구성원이거나 국회 내의 일부기관인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 등이 국회 내의 다른 기관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복수정당 제도하에서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타협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정당국가적 현실에 비추어 보거나 우리와 유사한 권한쟁의심판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독일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고 있다)에 견주어 보더라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역시 법률안 날치기 통과사건이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판례 변경을 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재판관들(황도연, 정경식, 신창언)은 1995년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은 인정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본 재판관들도 세부적으로는 다시 두 종류의 견해로 나뉘었다.

3인의 재판관(김용준, 김문희, 이영모)의 견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국회입법절차의 특성상 그 개개의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잘못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그로 인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관한 각종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안의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한다면 이는 곧 그 법률의 소급적 무효로 되어 국법질서의 안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결국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되었고, 그 본회의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방청이나 언론의 취재를 금하는 조치가 취하여지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그 의결절차에 헌법규정(제49조의 다수결의 원칙, 제50조의 회의공개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는 국회법 위반의 하자는 있을지언정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른 3인의 재판관(이재화, 조승형, 고중석)의 견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헌법 제49조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원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헌법 제49조를 형식적으로 풀이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는 다수파에게만 출석의 가능성을 준 다음 그들만의 회의로 국가의사를 결정하여도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공개와 토론의 원리 및 다수결원리의 정당성의 근거를 외면한 것이고, 복수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정면배치될 뿐만 (→2면으로 이어짐)



평화와인권

제 74 호

1997년 8월 8일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문 만 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0601-0602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금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 0652-76-1253 / 팩스 : 74-7486 / ID :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버) paulmun

"한총련 개기 좌시않겠다"

탈퇴 거부, 공안탄압 저지 비대위 띄워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정한 한총련 탈퇴 '투항기한'을 무시하고 소환에 불응하며 버틴 한총련 소속 대의원이 구속되었다.

이달 5일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박영진(전북대 총학생회장)씨가 갑자기 들이닥친 사복과 정복 경찰관 2개 중대에 연행되어 갔다. 검찰은 당초 전북지역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7월 31일까지 탈퇴를 종용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4일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에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김영진씨에 대한 강제연행은 검찰이 정한 소환기한을 하루 넘기고 이루어진 셈이다.

각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들인 한총련 대의원들은 이달 6일까지 소환에 응하라는 고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총련(의장 권한대행:정석용 전주대, 92)은 지난 달 30일 중앙성당 농성에서 확인한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즉, 검찰의 이러한 '한총련 개기' 수사에 관계없이 2학기 개강 직후 학생투표로 한총련 탈퇴여부를 묻고 그 결과에 따르

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다는 원칙 아래 경찰에 강제연행될 경우의 법정투쟁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사건 대책위에 따르면, 대학 당국이 전북총련 사무실의 전화를 끊고 사

실상 사무실을 폐쇄한 상태. 검경의 한총련 와해 기도에 맞서 학생들은 7일 <한총련 탈퇴 거부와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청년학생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무자비한 공안탄압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각종 공안탄압에 저항할 수 있는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이에 따라 학생운동 탄압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

5·6공 양심수 우선석방을 위한 캠페인

전두환·노태우 8·15 사면논의에 앞서 먼저 5·6공 양심수를 석방해야 합니다.

최근 대중만화가 이현세씨 등에 대한 검찰의 만화사냥은 한국 인권탄압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정치인들 중심의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8·15 특사 논의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득표전략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사면논의에 앞서 먼저 5·6공 시절 불법정권에 맞서 활동하다가 구금된 양심수들의 석방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민정부 등장 이래 무려 3606명의 양심수가 구금되었고 현재에도 890여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화합은 양심수 석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는 5·6공 양심수 우선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국민의 요구를 결집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에 귀기울여 주시고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지난 6월 한달에만 413명의 양심수가 구속되고, 올해 들어서 부터 7월 3일 현재 184일 동안 총 744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다. 월별 구속자수와 함께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수도 최근에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집권 당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양심수 대량구속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88년 2.1명/89년 4.1명/90년 4.9명/91년 3.7명/92년 3.13명). 또,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총 3606명이다.

최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발표한 <최근 시국공안 관련 대량구속사태와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3일 현재 구속된 양심수는 총 890명이며, 적용법규별로 볼 때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가 전체 890명의 49.3%인 439명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양심수는 30명으로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구속된 양심수가 57.5%인 512명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학생이 439명으로 49.3%, 재야 및 기타 117명

순이었다. 또한 장기수, 군경, 노동자 할 것없이 특정 신분예 관계없이 많은 수의 양심수가 발생했다.

한편, 체포나 연행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중인 학생이나 시험을 치루던 학생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경찰이 대학 내에 등산객으로 가장해 들어와 학생회관에 있던 학생들을 잡아가고 권총으로 위협을 하며 체포하고 심지어는 젓먹이를 데리고 구속 중인 남편을 면회하러 간 부인마저 '긴급체포'하는 등 불법체포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김영삼 정부의 이러한 마구잡이 인신구속과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은 날치기 정국으로부터 한 보비리와 경제파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의 국정농란, 대선자금 공개 압력에 이르는 정권의 위기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불순하고 의도적인 호도책이라는 게 중론이다.

구속 피해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의 공통된 요구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다. "결사의 자유 보장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4면에서 이어짐) 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헌법조항과 전체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조항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국회법조항의 위반이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인 헌법조항의 위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의 해석은 헌법에 대한 이해에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 많은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름발이 결정이 되고 말았다. 법률안 날치기 통과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헌법위반인지 아니면 법률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1995년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안 날치기 통과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3인의 재판관(황도연, 정경식, 신창언)의 견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강연회

일시 : 8. 12(화) 저녁 7시
 강사 : 홍근수 목사
 장소 : 고백교회
 주관 : 범민련 전북연합(준) 등
 문의 : 인권선교협 (231-0598)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안내 : 0652) 76 - 1253
 후원구좌 : 예금주 전 준 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 협 508-02-053278



힘차게 울리는 양심수 석방요구

'5·6공 양심수 우선석방' 서명운동 등 불붙어

최근 '국민화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대선 이전, 가능하면 곧 돌아오는 8월 15일 전후 석방 또는 사면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6공 양심수 우선석방을 위한 천주교 사제수도자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전·노 양씨가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으며, 본인들이 아직도 전혀 참회의 정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노 사면 복권 문제는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들이 온갖 권력을 휘두를 때 희생된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노 사면에 앞서 먼저 양심수들의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차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갈 것으로 보이는 서명운동은 전북지역에서는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과 정의평화정보센터에서 우선 추진되고 있다.

12일에는 범민련전북연합(준) 등이 주관하는 강연회가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편, 민가협과 민교협 등 17개 단체가 부당하게 구금된 양심수의 석방을 요청하는 '97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서울 명동성당 일대에서 벌인다.

양심수석방 캠페인 -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하여①>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 민주운동에 간첩조작

80년대의 변혁운동은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다. 이런 운동주체들의 고민을 공안당국은 언제나 불은시하여 날이 갈수록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운동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이 중 하나가 '좌경운동 세력 뒤에 복괴의 붉은 마수'하는 식의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80년대 중반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는 82년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85년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을 거치면서 견장을 수 없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85년 새학기 개강이 되자마자 각 대학의 총학생회실, 단과대학생회실, 학과 학생회와 과대표 앞으로 두툼한 우편물이 도착하게 된다. 이 우편물은 <예속과 함성>이란 제목의 미국 문제를 체계화시킨 문건이었다. 그 내용은 미군정 3년의 역사적의의, 예속의 현실, 주한미군과 매관정권, 핵과 한반도 등 5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문건에서 집필자는 예속과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재타도가 아니라 미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문건을 집필한 이들은 85년 9월 안기부에 의해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 강용주씨 등 15명이 관련된 대규모 학원간첩단사건이었다. 이들은

이미 6월에 불법연행되어 2달여를 고문을 당한 끝이었다. 김성만, 양동화씨 등은 미국 유학생 중 북한 공작원이라는 서정균(안기부 주장)씨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귀국, 간첩활동을 하였고, 다른 이들은 이들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고, 또 북한을 고무찬양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의 인사를 만난 것은 인정하나 어떤 간첩활동이나 지령을 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김성만씨와 양동화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황대권씨와 양동화씨의 후배였던 강용주씨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간첩으로 발표되었던 이창신씨의 경우 89년에 미국 고등법원에서 구체적 증거가 없고 사건이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했다(89년 2월 6일자 세계일보).

이들 중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들은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 강용주씨 등 4명이며,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만기 전에 가석방되었다.

김성만씨 등 4명에 대한 석방 노력은 그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민가협, KNCC,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에서 지속적인 석방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제엠네스티>는 이들을 모두 양심수로 선정하여 정부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 93년 <유엔 인권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가 김씨와 황대권씨에 대해 자의적 구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률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 김승환(전북대학교수, 헌법학)

2. 결정의 의의

국회의장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는 우리 국회를 얼룩지게 한 대표적인 행태이다. 다수결 원리는 단순한 힘의 논리나 형식의 논리만이 아니라 결정을 이루어가는 절차를 중시하는 원리이다. 일정한 사안에 대한 국가의사의 실체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국가의사를 형성해 가는 절차이다. 정당한 절차는 정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나아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얻어진 결정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설득력을 발휘하게 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어느 국가기관이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헌법적 권한을 침해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란 하여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원용한 독일의 예도 국회의원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고, 오래 전부터 의원과 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똑 같은 성질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5년의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은 1995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각하의견을 냈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철저히 법실증주의적 인 해석이다. 법실증주의는 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것에는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만이 법 해석의 전부가 아니다. 법 해석은 법 조문이 담고 있는 정신을 밝혀 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늦게나마 법 해석의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더욱이 비록 3인의 재판관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안 날치기 통과행위는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권한(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본 판단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견해라고 보아야 한다.

이번의 결정으로 법률안 날치기 통과는 위법이라는 것이 유권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국회는 이 사건 법률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여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다시 의결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헌법 재판소법 제67조 제1항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 이를 무시하는 경우 국회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경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 결정의 문제점

헌법재판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독일에서 법률은 내용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도 위헌무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일찍부터 확립된 판례이다. 법률의 절차상의 하지는 그것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경우 위헌이며 무효라는 이론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사건 결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날치기 통과된 법률은 히틀러 시대의 안개법률(Nebelgesetz)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법률이다. 그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법률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안 처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위헌이다. 3인의 재판관(이재화, 조승형, 고중석)의 판단은 이 때문에 정당하다.

다른 3인의 재판관(김용준, 김문희, 이영모)은 이 사건 법률안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을 위반한 흠은 있지만, 헌법을 위반한 흠은 없으므로 위헌무효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법 제72조(국회본회의 개의)와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는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원리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이론적으로 말할 때 국회법의 이 조항들은 헌법전에 있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헌법조항(→2면에 이어짐)

평화와인권

제 75 호

1997년 9월 3일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문 만 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③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금정미 성지 사회관)
전화 : 0652 - 76 - 1253 / 팩스 : 74-7486 / ID :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한국사람은 죽어도 좋다?

미국무부, 대인지뢰금지조약 한반도에의 추진

전세계적인 대인지뢰 철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무부 등이 한반도를 지뢰금지협약에서 예외인정 지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제무대에서는 대인지뢰의 생산·보유 등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제회의가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19일까지 오슬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 미국무부 제임스 루빈 대변인은 한반도가 북한의 공격위험이 상존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후 타결될 대인지뢰금지조약에서 한반도를 예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없는 지뢰금지조약 타결해야

그러나, 이러한 미국무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진작시키거나 야 한다는 그 동안의 국제사회, 특히 국제 인권단체들의 노력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미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지난 달 26일 지뢰금지조약의 조속한 타결을 지지하는 세계 100여개국에 지뢰의 예외없는 전면 금지를 적극 밀고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매년

2000여명을 죽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드는 모든 대인지뢰를 전면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예외 불가' 조항이 초안 말미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십자위원회는 미국이 예외조항 삽입을 고집할 경우 캐나다가 주도하고 있는 대인지뢰금지조약 협상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등을 조약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저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 타임스>도 이날 빌 클린턴 미행정부에 대인지뢰금지조약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인권감시(HRW), 유엔아동기금(UNICEF), 워차일드(War Child) 등 수많은 비정부기구들도 지뢰추방을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다.

96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뢰 전면금지협약을 재확인한 브뤼셀 선언은 9월 1일 노르웨이에서 전면금지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 올해 12월 2-4일 오타와에서 열리는 각료급 회의에서 협약을 성립시키는 서명식을 갖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오슬로 회의는 조약 문안작성

등 지뢰 전면금지협약을 마무리하는 회의인 셈이다.

국제적십자사 등에 따르면 지구 곳곳에는 현재 1억 1천만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세계인구 50명당 1개꼴로 지뢰를 발 밑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앙골라의 경우 인구는 1천명에 불과하나 매설된 지뢰는 1500만개로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 한반도에 대인지뢰 1백만개 매설

미MSNBC가 지난 달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약 1백만개의 병어리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는 매년 10여명에 이르는 병사와 민간인 피해가 속출해 왔다.

요즘의 대인지뢰는 주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발목만 날려보내는 식의 불구자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된다. 그게 적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뢰는 가장 잔혹하고 무분별한 군사무기라고 비난받는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세계 70여개국에 깔려있는 지뢰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손발이 잘려 불구가 되는 이들은 매년 2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20분에 1명꼴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희생자 10명중 8명이 민간인이며 5명에 1명꼴로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다.

새로운 통일운동이 필요하다

전북지역 통일행사에 대한 간략한 평가

52주년 광복절이 끝남에 따라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통일운동이 일단락되었다. 올해는 봄부터 시작된 북한동포돕기운동으로부터 꾸준히 통일운동이 이어져온 만큼 다른 해와 비교하여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들이 준비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8월행사를 치르기 위해 구성된 평화통일민족대회 전북추진본부가 8월 22일 오전 10시 전북연합 사무실에서 평가회를 갖고 해산하게 되었는데, 이와 함께 간략하게 전북지역 통일운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올해 전북지역 통일운동의 특징은 첫째, 봄부터 북한동포돕기운동 전북본부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남는다.....
식량없이 평화없고 무기쌍인 곳에 평화없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운동이 절실하며 꾸준히 평화운동을 전개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활동해오고 있는 가운데 그 연속선 위에서 8월행사가 치러졌다는 점이다. 둘째, 범민련과 민족회의로 나뉜 전국의 모양과는 달리 전북지역에서는 어쨌든 하나가 되어 대회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셋째, 노동자들의 꽃다지공연을 비롯하여 8.15 기념 마라톤대회나 통일기원 음악제처럼 대중적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중심사업에 놓였다는 점이다. 넷째, 인권강연, 통일강연 등을 몇 차례 집중배치하여 행사의 의의를 되새기게끔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과는 달리 전북지역 통일운동의 난점 몇 가지가 다시 드러났다. 첫째는 '평화로 한걸음 통일로 큰걸음'이라는 중심구호와는 달리 '평화와 통일'의 내용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그

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4차회담이나 통일기금 3200억의 사용 등 굵직한 정치적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를 전혀 쟁점화시키지 못하였으며, 군비축소·평화정착의 절실함과 가능성을 드러내주는 행사가 적절히 안배되거나 군산 미군기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업을 배치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게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97년의 전북지역 통일운동은 행사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관성적인 사업에 머물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지만 올해도 역시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제외하면 꾸준히 통일운동을 못하고 캘린더식 운동에 머물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통일운동을 고유사업으로 하는 시민사회운동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바이지만 무엇보다도 '대중적 통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남북한 정세에 비추어 보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식량없이 평화 없고 무기쌍인 곳에 평화 없다. 꾸준히 평화운동을 전개할 사람들이 더욱 절실한 8월이다. <평화와인권>

“인권침해조사기구 설치할 때”

국제인권단체들 '전·노사면' 반대

전·노씨에 대한 석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내 뿐 아니라 국제인권단체들도 전·노씨 사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달 6일 엠네스티는 보도자료 통해 “오늘날까지도 광주학살을 비롯한 과거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이러한 과거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덮어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또 “광주학살과 고문, 부당한 재판 등 각종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독립된 인권침해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 최대의 고문반대운동 단체인 OMCT도 김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전·노씨 사면은 인권보장의 심각한 후퇴로서 국제적 망신”이라며,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사면이 철회되도록 공식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홍콩의 인권단체들도 “전·노씨의 사면은 국민을 위해 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상당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안내 : 0652) 76 - 1253
 후원구좌 : 예금주 전 준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양심수석방 캠페인 —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②>

'6월항쟁 장기수' 허정길 - 무리한 수사와 고문이 빚어낸 인권피해자

1987년 6월에만 연인원 5백만에 달하는 민중이 20여일 동안이나 줄기차게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온 국토가 거대한 항쟁의 불길에 쌓여있던 87년 6월 19일 밤 11시 10분경, 대전에서는 시위를 막던 전경 한 명이 경찰차 지선을 뚫고 달려온 버스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재판기록에는 “허씨가 살해해도 좋다는 판단으로(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전경이 있는 지점을 향해 버스를 시속 50km로 지그재그로 몰아 박 일경 등 전경 3명을 사상케 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건 현장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기씨는 “버스 앞 뒤 유리창이 최루탄에 맞아 깨져 있었고 버스 내부는 최루가스로 뒤범

벅이 되어 있었다”며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허정길씨 자신도 최근 옥중인터뷰에서(주간 내일신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며 거짓증언을 강요당했”으며 “당시 버스가 중앙선에 서 있었고, 올라가 보니 운전수는 없고 시동은 걸려있는 상태였다. 누구를 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치우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몰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허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같은 날 '대전충남 6월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와 산하 '허정길 석방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도 성명을 내고 “6월 민주항쟁 10주년을 전국민이 기리고 계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허씨를 석방하고 명예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각계인사들도 청와대와 법무부에 허씨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보냈다. 그러나 회신은 한차례 뿐이었고, 그 내용은 “차후 사면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정도였다.

제도정치권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의 임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내란의 수괴'에 대한 사면이 기정사실화시켜 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억압에 대항했고, 고문끝에 살인죄를 적용받아 15년형을 선고받은 장기수 허씨(41세)는 이미 형기를 3분의 2나 마친 상태다.

<성명서> 전노씨 추석 전 조기사면 제기에 대한 전북지역 사회단체 성명

1.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지난 달 31일 '추석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번 이회창 대표의 전·노씨 추석전 사면 건의는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임기내 사면주장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대선을 앞둔 여야의 정략적인 사면경쟁으로 반역사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의 전·노씨 사면건의는 이회창 대표 스스로 지켜왔다는 '법대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자금논란에 이어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는 '표대로'의 원칙에 그가 충실함을 재차 확인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전·노씨에 대한 무조건 사면제기 역시 반역사적이고 정략적인 것이다. 전·노씨 사면에 대해 그동안 국민회의는 공식적으로 선사와 후사면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김대중총재의 조건없는 사면제기는 무원칙한 정략적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그나마 남아있던 야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3. 우리는 계속된 성명과 주장을 통하여 '국민대화합', '동서화합' 등의 논리를 앞세운 전·노 사면논의가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싸워온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따라서 광주학살 문제와 양심수 석방 문제 등 산적한 5·6공 인권피해에 대한 해결과 청산 없이는 어떠한 '국민화합' 주장도 공문구임을 지적해왔다. 우리는 전·노 사면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정략적인 조기사면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1997. 9. 1.

정의평화정보센터(문규현),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박창신, 한규재, 김영근),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염경석)

미공군기지, 우리땅 거저 쓰면서 군산공항 이용료 4배 인상 요구

"오는 12월 7일로 국내 민항기의 군산 미공군기지 사용협정(5년)이 끝남에 따라 미공군과 공단측은 올해 초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전체 12개 협의사항 가운데 7개항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이착륙료와 시설 개선비용부담 비율 인상, 민항기 증편관제권 우선순위 조정 등 5개항에 대해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미군측은 특히 민항기 이착륙료를 1편당 현행 60달러에서 220달러선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공항시설 개선비용 부담률도 현행 25%에서 50%로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군은 또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활주로 개선비용의 25%에 해당하는 7억 2천여만 원도 요구하고 있다. 미군은 한국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재협정이 맺어지지 않으면 현재 하루 7편을 운행하는 민항기가 미군기지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겨레신문 8월 15일자)

주한미군이 미군기지에 대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시민들에게 미군의 한 관계자는 "이 땅은 우리 미군이 일본에게서 직접 접수한 땅이다. 그리고 이 땅에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지을 때 한국측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미군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다.

이러한 미군의 태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미군측은 "우리는 한

반도에 한 조각의 땅도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 땅이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땅 - 주한미군기지, '전세계의 평화 유지'라는 미명 아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가까운 일본을 포함하여 여러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불평등한 조약을 맺은 곳은 없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기지사용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한 곳이 없으며 매년 엄청난 액수의 분담금을 미군에게 건네주는 곳도 없다. 특히 자기 국민이 미군에게 맞아 죽어도 아무소리 못하는 곳 또한 없다. 군산에서도 90년 정관용부부가 미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옥에 간 사람은 살해자가 아니라 피살자의 가족과 이에 항의한 시민 뿐이었다.

우리 집 지켜주는 방법이 우리 가족을 감간하고 살해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당하고만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미군기지 대책위(준)가 구성되어 군산과 같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달 12일 군산공항 이용료 인상요구에 대한 시민단체의 포럼이 열리기도 했다. 아직은 시작의 단계지만 우리의 관심이 모아질 때 우리 땅 미군기지에 대한 관리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군산연합
기관지 (군산연합) (8호)에서
전재. 표현을 약간 손봤음.

"가정폭력=범죄행위" 법 제정돼야

- 제정주간 선포 등
법제정운동 본격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 북연대>가 확대 개편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여성운동권에서는 이미 지난 해 거리서명 등을 비롯해 국회에 '가정폭력방지법안'을 제출하여 국회 법사위와 여야 3당의 입법 약속까지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오해와 무지가 만연해 있는 데다 올해는 대선까지 중요한 정치일정으로 잡혀 있어 오는 9월 10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정될 것인지 여부조차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지역 여성단체들의 대응이 그래서 더 바빠지고 있다. 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연대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불가피성 등을 알리고 법안 시안 설명회도 열었다. 전 북연대는 여성운동단체들 뿐 아니라 전북시민운동연합, 정의평화정보센터 등 시민·인권 운동단체는 물론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예방협회 등 아동·복지 단체의 참여까지 이끌어냈다.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해 둔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운동 기간'에는 가정폭력 사진전을 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제정운동기간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치른다.

밖에서는 자본과 공권력의 폭력에, 가정에서는 남편의 폭력에 유린당하는 여성에게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평화와인권

제 76호

1997년 9월 19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문만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③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숲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ID: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무조건사면론'이 나라망친다

역사의 심판이 정권욕을 넘어서야 한다

지난 4월 17일,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핵심세력들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을 때 온 국민과 세계의 양심들은 모두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였다. 그것은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들의 범죄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일의 역사는 당대가 만드는 것. 지난간 역사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당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며 역사를 만드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그동안 '선반성 후 사면'을 주장하다가 대통령선거철인 데다 최근 영남지역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자 '무조건 사면론'을 내세워 영남지역의 지지율을 실제로 끌어올렸다.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도 이에 뒤질세라 먼저 '추석전 사면론'을 들고 나왔다가 알파한 정치술수로 찍혀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언론은 이를 재미있는 기사거리로 다루어 이러한 정치놀음이 '현실정치'에서는 당연한 것이인양 사람들의 인식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광주학살에 대하여 '사면'이라는 하나의 평가서를 낼 때 그것 자체가 역사의 한 장이 되며,

다음 세대에는 '학살=사면'이라는 '역사의식'이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김종필 같은 유신잔당이 박정희군사독재 시절 정치도구였던 '공화당'의 이름을 걸고 10%대의 지지율을 근거로 살아남고 있는 현실을 보라.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나라, 즐거운 나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 참피한가? 나이트 처지에 감옥에 있으면 너무나 안되어 보이는가? 그렇다.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들은 그것을 금지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죄값을 치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 두가지 판단은 모두가 옳은 것이다.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은 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두 전직대통령을 처벌한 것만으로도 과거에 대한 심판은 족하며, 이제 전직대통령들도 사면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대화합의 시대를 열자. 결자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대화합도 좋고 결자해지도 좋다. 그러나, 누구하고 누구가 화합해야 하며 누가 그 매듭을 풀어야 하는가?

최근 전두환은 광주학살 당시 공수부대에 무참히 살해된 그 사람들이 '양민'인지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880억원의 비지금을 또 찾아냈다고 한다. 화합이 이루어지려면 죄지은 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급의 상식이다. 화합이 이루어지려면 죄지은 자의 부정한 재물을 모두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은 기본적 조치이다. 누가 감히 대화합의 준비가 모두 되었다고, 이제 충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가?

더욱이 누가 그 매듭을 풀어야 하는가?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지는 모르나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심판은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재판부에 앞서 국민들이 거리에서, 농성장에서 주장하였고 국민들 덕분에 그 미혹한 '5.18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집단학살을 저지른 희대의 범죄자. 아직도 5·6공세력의 부활을 추진하는 군부파시스트, 그리고 여전히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이 뻔뻔스러운 자들을 위해 '종교적 차원'에서 구제하지는 주장이나 '정치적 화합'을 위해 사면하지는 주장은 그것이 설령 선의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가 될 것이며 그 선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전두환·노태우를 처리하는 방법이 사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승복하지 않는 한 그들을 반드시 사면이라는 방법으로 구제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평화와 인권)

“가정폭력 - 법으로 막아야”

방지법 제정은 여성기본권 확보 차원

정기국회가 개원되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진행되어 왔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북연대에는 현재 전북여성운동연합 등 16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화목해야 할 가정이 폭력으로 얼룩질 때 우리사회의 평화는 깨어진다. 가장 믿어야 할 가족에 의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황폐화를 불러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은연중 폭력이 학습되어 폭력아동, 폭력남편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행위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자 전국적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법안제정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를 인식하여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보호법칙'과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라는 인권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법적인 테두리에서 뿐 아니라 완전하게 때릴 자유와 권리도, 맞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기간]
 일시: 1997년 9월 22일 ~ 27일
 행사: 사진전 및 문화공연(객사)
 문의: 0652-87-7324

노동·시민운동 “조례제정” 한목소리

‘조례제정 시민연대’ 워크샵 가져

정의평화정보센터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로 구성된 조례제정 시민연대가 9월 11일 주민참여조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샵에서는 1부 행사로 그간 활동경과보고와 주민참여 조례의 필요성과 의의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2부 순서로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의 참여'를 주제로 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여러 사안에 대한 노동운동 세력이 참여하는 유형과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학섭(전북대 사회학) 교수의 기초발제로 진행되었다. 조례제정 시민연대는 앞으로 가두캠페인 및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10월초 조례를 청원할 예정이다.

[조례란 무엇인가] 조례란 지방자치체가 갖는 자치행정권, 입법권, 행정권 중 자치입법권에 해당된다. 자치입법으로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 어울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과정의 원활유 역할만을 갖게 된다. 조례는 또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치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제정자와 수범자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5개 자치단체 중 148개 자치단체가 정보공개 조례를 시행 중이다.

▶ 제2회 인권영화제 - 서울

인권과 영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영화들, 모두 25편이 시민에게 완전 무료로 공개됩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는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의 후원만으로 이루어 집니다(개인 1만원, 단체 5만원).

일시: 1997년 9월 27일 ~ 10월 4일
 장소: 미정
 주최: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문의: 02-741-2407, 741-5363
 후원구좌: 국민은행 822-21-0276-824 (예금주 서준식)

▶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 한마당 - 전주

정보가 자본에 의해 독점되고 상품화되는 경향 속에서 진정한 정보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운동의 실천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 1997년 10월 27일 ~ 31일
 장소: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주최: 정보통신한마당 조직위원회
 문의: 0652-232-9151, 70-3853

▶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교육 - 전북 공대위

전자독재시대의 신호탄인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 공대위에 서 귀 단체를 방문합니다.

교육문의: 0652-232-9151, 76-1253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안내: 0652)76 - 1253
 후원구좌: 예금주 전준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고용안정 위해 총파업 불사”

[민주노총] 9월 말부터 비상총회 열어 총파업 결의하기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은 11일 “최근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산업구조조정법 도입 추진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정·재계의 움직임들을 저지하기 위해 이달 말과 10월중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재계는 지난 1월 노동법 투쟁으로 철회된 정리해고제를 산업구조조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고용안정 대책위원회 가동과 고용안정협정 체결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재경원과 채권단은 최근 기아자동차 사태 등에서 부도유예협약의 전제조건으로 노조에 감원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대량해고를 불러오는 감원동의를 요구를 철회하고 노동시간단축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퇴직금 최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 철회 △임금채권 보장기금 신설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선 19일 '투쟁본부' 구성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에 이어 28일 노조원 3만여명이 참석하는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과 다음달중 산하 1천1백여개 단위 노조에서 총파업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수석방 캠페인 -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③

통일인사 강희남 목사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가혹한 형벌

40일 동안의 단식.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같은 선비정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 강희남(78)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87년 4월 그는 5공 독재정권 연장을 위한 이른바 '4.13호헌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5공 독재정권이 저지른 불의에 맞서 감옥에서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9일 동안 망설이고 고민하던 끝에 내 한몸 죽어 이 나라 민주화의 밑거름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보람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목숨건 단식이 1주일쯤 지나면서 고통이 꺼지고 교도소쪽의 회유와 협박도 심해졌다.

또한 단식 18일째가 되는 5월 11일에는 고 함석헌 선생과 김승훈 신부 박형규 목사 등 재야인사 18명이 함께 서명해 단식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단식을 멈추지 않았다. 죽음을 각오한 외로운 싸움이 작은 결실을 맺음에 따라 6월 1일, 40일 동안의 단식을 마쳤다. 강희남 목사의 이 단식투쟁은 바로 6.19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이어져 더 큰 의의를 갖는다.

원로 재야운동가로서 평생을 민중과 함께 살며 민중해방과 인권운동에 몸바쳐온 그분.

강희남 목사가 범민련 남측본부의 의장으로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다시금 95년 11월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초겨울에 76세 고령의 노인을 구속수감하였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범민련 사건과 관련한 실형만기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78세 노령으로서 병동에 수감되어 있는 통일인사를 94년 조문단 사건을 들어 지금까지 산 것의 두배가 넘는 감옥살이를 더 살리겠다고 가두어 놓고 있다. 78세의 병약한 늙은 몸의 강희남 목사를 계속하여 감옥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은 인도주의적·도덕적·인륜적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이들도 웬만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감옥살인데, 80이 다된 병약한 노인에게 감옥살이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잔혹한 행위이다. 그 악랄하다는 군사독재정권 아래서도 80 가까운 고령의 노인을 감옥 안에 가두어 두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도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정부가 78세의 노령으로 환자의 몸인 힘없는 노인을 구속하여 가두는 것은 스스로 군사독재 정권보다 못한 비인도적인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강희남 목사가 실형만기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조문단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감되어 있는 것은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에 조금도 좋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대립과 오해만을 유지시킬 뿐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듯 인도주의적·인륜적·도덕적 차원에서 보거나 시대적·역사적·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인사 강희남 목사가 구속수감되어 있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하루 빨리 석방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 냉전유물 '지뢰'를 걷어내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위한 국제회의(9월1~19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반도의 지뢰 사용은 무조건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올해 오슬로 회담에서 인권단체와 그 외 대다수 협상 참가국들의 압력을 받아 협상 자체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지뢰가 남기는 것들

전세계에서 해마다 수만명이 지뢰 사고로 죽거나 장애자가 되며 이 중 30~40%가 전쟁과 무관한 여성과 아동이라는 사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뢰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분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은 대인지뢰의 피해자들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민간인이나 군인들의 피해는 대부분이 6.25때 매설되었던 미확인 지뢰에 의한 것이다.

작년 7월 경기도 북부지방의 수해로 인한 유실된 폭약과 지뢰로 인해 민간인들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랐다. 자연재해로 인해 얼마든지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가능함을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한반도는 6.25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45년 동안의 직간접적 피해와 분단상태의 지속으로 언제고 지뢰로 인한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구조적 폭력에 의존하는 것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우리들이 전쟁의 대가를 깨닫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쟁의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전쟁은 죽음'을 의미한다. 전쟁의 전면적(무차별적)인 파괴성, 그리고 폭탄을 터뜨리면 단지 '나쁜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죽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문화의 호전성은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적과 우리'라는 인식 아래 묶어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다시 대외정책과 국가방어에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하는 것이 충실한 시민이라는 맹목성을 퍼뜨린다.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장이 철저한 경찰, 더 잔혹한 감옥들, 그리고 사형처벌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범죄

'적과 우리'라는 세계관은 전쟁의 무차별적인 파괴성과 폭탄을 터뜨리면 단지 '나쁜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죽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를 더 유발시키는 그 구조적인 폭력에 최종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런 사태 말이다.

대인지뢰는 철조망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인지뢰에 관한 한반도의 특수성은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와 그 관계가 밀접하다. 그것은 미국 군수업체의 안정적인 시장 및 이윤의 확보와 함께 한반도를 반(半)평화 상태로 고착화함으로써 분단 이후 누려온(바로 그 분단 상태를 거름으로) 보상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역대 한국 정권의 계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러한 비용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 한반도에도 평화가 오면 언젠가는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3천원짜리 지뢰

하나를 없애는 데 1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우리의 세금으로 무기를 사들이고 우리의 세금으로 다시 그 지뢰를 캐내야 한다. 그 세금으로 우리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도 있다. 지뢰는 과연 전쟁억지력에 절대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세계는 군의 현대화, 정보화로 지뢰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조기경보 시스템 등 다양한 안보시스템들을 종합·평가하여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쟁과 무관

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인지뢰의 보존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다.

갈등해결 위해 무기 버려야

정부는 제임스 홀링워스 전(前) 주한미군사령관 등 군사전문가들이 "지뢰 사용이 미군과 한국 민간인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초래하는 '재앙을 위한 작전계획'(A game plan for disaster)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어떤 것이 국제사회에 평화와 인도주의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제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 무기와 폭력(결국 같은 것이다)이 아닌 다른 수단을 찾아보도록 정부에게 권하고 싶다. 지금 열리고 있는 초안작성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예외없는 대인지뢰 금지원칙 삽입을 위해 활동한다면 어떨까!



평화와인권

제 77호

1997년 10월 6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문만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송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ID: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오만한 주한미군

군산 미군, 활주로 사용료 4배 인상요구

"남의 땅을 쓰면 사용료를 내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땅주인인 한국민들에게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내 23개 종교·사회단체가 모여 '군산미군기지 민항활주로 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상임대표 오충일, 문정현, 문재곤)을 결성한 소박한 이유다.

남의 땅 쓰면서 '사용료 내라'(!) 지난 95년 군산미군기지사용에 관한 협정(MOA)이 체결된 뒤 한국의 민간항공사는 여객기가 한 번 이착륙할 때마다 60달러씩을 활주로 사용료로 미군에게 지불하고 있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는 절대로 맞지 않는 법이다. 기지이용료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미군측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다. 여객기 이착륙료를 현행 1편당 60달러(1천 파운드당 60센트)에서 1천 파운드당 1달러 75센트로 인상하고, 96년 활주로 보수비 중 25%인 799,539달러(7억 2천만원 정도)를 부담할 것과 활주로 보수비 부담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온 것이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미군측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일명 한미행정협정) 부동산 부과위원회(FACILITIES AND AREAS)에 이

문제를 상정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협상 시한은 올 연말인 12월 7일까지다.

결국 시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 '시민모임'은 미군측의 인상요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협상당사자인 국방부가 미군측의 인상안 요구 중 활주로 사용안과 활주로 보수유지비 인상안의 철회를 미군측에 요구하라고 '시민모임'은 촉구하고 있다. 과대한 임대료 부담 때문에 미군이 철수한 필리핀이나, 1998년까지 임대기간이 제한된 오스트레일리아 등 타국 주둔미군기지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전국 1억여평 규모의 땅을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몇 배의 돈을 더 지불하는 것은 민족자주권의 포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군관할(국방부) 비행장의 95년 활주로 유지보수비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군관할 10개 비행장의 공항수익 대비 활주로 유지보수비용은 평균 22.8%이다. 이 중 군산비행장은 가장 높은 67.9%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미군측의 활주로 유지보수비용 50% 인상요구는 설득력이 없는 셈이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놓여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국 96개소 약 7천 5백만평(94-95 국방백서)의 기지와 시설의 사용과 반환, 관리 등은 전적으로 미군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별다른 계약없이 기지를 사용하고 - 그것도 무기한으로! -,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미군기지가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일체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 군사상 필요라는 매우 추상적인 명분으로 기지 밖의 일반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제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주둔군지위협정의 기지와 시설에 관한 조항(4조, 6조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즉 공여지 사용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주인(한국)과 세입자(미국)의 관계일 뿐이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민족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이자 '요구'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인터뷰 - 2면)

①

●전·노 사면을 운운하기 전에, 고문·실종·의문사·조작간첩·삼청교육대·언론통폐합 - 5·6공 인권범죄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즉각 실시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전·노 사면저지:정치권과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결집된 힘으로!

21세기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

'전북지역 87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식' 따뜻한 분위기 속 열려

"87에서 97까지, 그리고 21세기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소제목의 전북지역 87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식이 9월 27일, 전주 목원부페에서 10여년간 전북지역 노동자운동을 주도해온 100여명의 전현직 노동운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따뜻하게 열렸다.

전북지역 민주노동운동의 산 증인인 전 전북노련 현주역의장, 전 전북노동운동협의회 오두희의장, 현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영경석의장 등 3인을 공동대표로 하는 '87노동자대투쟁 10주년기념사업 전북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문정현신부, 고영자도의원, 이강실목사 등 전북지역에서 그동안 노동운동의 발전을 함께 지켜온 민주인사들이 함께 하여 노동운동의 한 매듭과 새로운 전망을 축복해 주었다.

1부 기념식에서 문정현 신부는 자신이 전북노련 고문직을 맡았던 지난 10여년 간의 노동운동을 회상하며, 갈데없어 전동성당에 차가운 바닥의 방을 만들어 기거하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박복실일사를 추모하면서 눈시울을 붉힌 뒤 "우리 모두가 곁

을 걸어왔으며 목숨이 모질고 기운이 남아 살아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넓게 보면서 인간의 해방을 위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자. 연대로 두터워져 밝은 세상을 만들자."는 당부의 말씀으로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2부 순서에서 탄압과 항전의 신화를 만들어온 각 조직들 - 선전자, 세일나염, 아세아스와니, 해태관광 등의 노동운동을 전개했던 주체들이 나와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전북노련과 노동운동단체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대표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이 소개되는 시간도 있었다. 마지막 순서에 나온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간부들은 선배동지들의 투쟁을 이어받아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처음 이 집회를 제안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참석자가 예상보다는 다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간 배출한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모처럼 만나 하나되는 경험을 가졌으며,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고 자평하였다.

동양차체, 노조결성에 '식파이프·돌 세레'로 화답

- 대우 노무관리팀 개입한 전근대적 노동탄압 -

대우자동차의 차체 대부분을 생산하는 동양차체에서 지난 달 21일 노조가 결성되자 사측 관리자들이 23일 새벽 노조설립 보고대회를 갖기 위해 회사에 들어가던 노조원들을 폭행하고 노조탈퇴 공작을 벌이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말썽을 빚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우의 노무관리팀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조설립 이후 회사 관리자들이 폭력을 행사해 이용석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1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관리자들은 폭행 이후 노조위원장을 납치해 부산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위원장은 23일 새벽 6시 반 전남 곡성에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 화를 모면했다. 사측은 현재 개별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해 노조탈퇴각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측은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직접·비밀·무기명투표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불법적인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양심수석방 캠페인 -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

학생운동탄압 - 기본적인 민주주의마저 짓밟아

계속된 탄압, 무참히 빨간철을 당하는 수많은 청년학생들. 물론 탄압받는 대상이 학생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나, 공간기관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과 함께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시키고, 소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의 기본적인 민주주의마저 짓밟는 비이성적인 탄압이 극성을 부렸다.

김영삼 정권의 공안 탄압은 과거 5.6공보다 더 심하며 대선을 앞두고 날이 갈수록 그 광폭함은 더해가고 있다.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 집권 5년 만에 시국 관련 구속자는 총 3천6백6명에 달한다. 94년 389명, 95년 285명에 이르던 구속자가 96년에는 학생구속자만 922명(이중 국가보안법 494명)에 이르렀다. 게다가 올 97년에는 6월 현재 구속자가 744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6월 한달에만 413명에 달하는 구속자가 발생했다. 지금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는 이런 시국 관련

구속자로 넘쳐나고 있다. 97년 7월 3일 전국에 걸쳐 현재 수감되어 있는 구속자는 모두 890여명이며, 그중 4백39명(49.3%)이 학생들이다. 전북지역 학생들 역시 무고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총학생회 후보 추대식을 조작한 의혹을 사고 있는 '전북대 혁신대오'조직사건, 집시법 위반이라는 '학생연대'사건 등 20여명이 넘는 현재 학생, 군인, 시민인 이들이 전주교도소에 군대에 발이 묶여 부모님들, 친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은 수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폭력법 등 반민주주의적 악법들이 양심수의 양산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양심수의 양산은 민주주의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인권,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수의 발생

을 막기 위한 투쟁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제기 및 투쟁이 필요하다.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공안탄압·민생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 것이 절실하다. 공안당국의 실적올리기에 무고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며 정치탄압에도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사건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와 증인을 제시해야 하며 사건의 진실이 올바르게 규명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대시민 선전활동과 법정투쟁 등 무죄투쟁을 벌여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김영삼정권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의 중지와, 한걸음더 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로 민주주의의 행보를 가로막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날이 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차가운 창살 아래서 청년의 정신을 품고있을 학생들에게 보다 희망찬 소식이 빨리 갔으면 한다.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진행 경과>

(전주대 단기동맹, 학생연대 등 탄압 사례 중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한 일지)

- 1997년 6월 25일 오전 8시를 기해 전북대 김선미 등 15명 연행 / 전북대 조수진(현 부총학생회장, 심리94), 황병록(총학생회 연사부장, 사회95), 김행환(행정학과 부회장, 행정96) 집에서 연행 /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사건 대책위원회 구성
- 1997년 6월 27일 구속영장 청구 및 전원 발부 / 3인(엄성복 외) 추가 구속 / 전북연합 기자회견
- 1997년 6월 28일 전북대 총학생회 사회부장 이진영(경제95) 연행
- 1997년 7월 3일 기무사, 전북경찰청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관련 기자회견 / 대책위 기자회견
- 1997년 7월 23일 검찰기소 / 1인 구속취소로(진민중) 풀려남
- 1997년 8월 4일 전북대 29대 총학생회장 박영진(섬유91) 응급실에서 치료중 불법 연행
- 1997년 8월 11일 송승용, 최용원 1차 재판(군, 검사구형 2년)
- 1997년 8월 13일 1차 심리재판(혁신대오 사건)
- 1997년 8월 21일 4인(최지훈, 유호, 이승일, 홍진의) 보석
- 1997년 9월 1일 송승용, 최용원 재판 연기(군)
- 1997년 9월 13일 2차 재판(증거채택)
- 1997년 9월 19일 김중희, 이정민 등 2인 2년 선고, 조수진 등 5인 집행유예 선고
- 1997년 9월 22일 송승용, 최용원 선고재판(군, 선고 무기한 보류)
- 1997년 9월 30일 오동국 1차재판 예정(군)
- 1997년 10월 24일 3차 재판 예정

"우리땅 사용료 요구는 적반하장"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최종수 신부)

시민모임의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동기는...

지난 8월 미군기지 문제를 진단하는 시민포럼에 참가한 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자주권 회복과 민중에 대한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거리낌없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점과 성과는 무엇인지...

미군기지 이용 협상은 미군부대와 국방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상에 한국공항공단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 군산시청은 참관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SOFA나 MOA 같은 불평등협정이 철폐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한계는 항상 남는 셈이죠. 그러나, 투쟁은 '민항사용료 인상'과 같이 대중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단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협상내용 중 활주로 유지보수비는 철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군산시민의 반대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성과라고 봅니다.

시민모임의 앞으로의 방향은...

오는 10월 18일에 미군부대 앞에서 민항사용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일에는 군산시청에서 미군부대까지 '평화화전거타기 대회'가 열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는 '우리땅 찾기 운동본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보다는 늦었지만 이곳 군산에도 이번 투쟁을 계기로 '운동본부'가 결성되어야 한다는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맘의 대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90년대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 외국인노동자 문제이다. 값싼 노동력을 도입한다는 정부정책 하에 국내에 들어오게 된 외국인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 사회적 냉대 속에 현재 개관 노예나 다름없이 생활해왔고, 급기야 95년 이래 매년 명동성당 농성 등을 통해 '인권보장'을 소리 높여 외쳐왔다. 국내 사회단체들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린에 주목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노동자, 노예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책임져야 할 모든 노동법상의 문제, 사회간접자본의 부담과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별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묵인하되, 이를 끊임없이 불법으로 묶어놓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한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비인간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이미 유럽 등지에서 저개발국가를 상대로 시행해온 이른바 레몬즙 짜먹기란 딱지가 붙은 제도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인해 '인권탄압국'이란 비난에 직면해왔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정부는 5월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획기적인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정부가 추진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가 국내노동자들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재계는 '인건비 상

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노동자가운데 58.1%를 차지하는 현실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외국인노동자에게 합법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ILO(국제노동기구)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노동에 대한 임금 청구나 산재에 대한 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도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지난 93년의 판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은 이런 의미에서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노동기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달 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하는 BYC섬유에서도 중국인 산업기술연수생 80여명이 임금 인상과 외출허가, 그리고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권리조약의 비준을 서두르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용을 합법화하여 맘의 대가가 누구에게나 동일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구좌: 예금주 전 준 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평화와인권

제 78 호

1997년 10월 30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문만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금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ID: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전자주민카드를 막아 내자

전북도의회 전자주민카드 '98 예산책정에서 제외

전북도의회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위한 '98년도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명백히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왕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는 전북도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화하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환영했다.

전국민의 개인 정보를 하나의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하여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기저에 깔려 있는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발상으로 간주돼 비난받아 왔다. 또한 '98년 4월 제주도 지역 시범실시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대운동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의회의 '98년 전자주민카드 예산 책정 거부'는 타 지역의 지방의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전자주민카드를 물론 포괄적인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함께 국민을 전자적 장치로 통제하려는

국가권력의 시도에 근원적으로 쐬기를 박고자 하는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들에게는 적지 않은 성과로 받아들여질만 하다.

공대위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는 "정부의 정책적 독단과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만들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린 일"이라고 강조하고 "전북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기초로 전국적으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앞뒤

국제적인 대인지뢰 금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인지뢰반대운동단체가 공식 발족하게 돼 주목을 끌고 있다.

[(가칭)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10월 24일 현재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대표 김창수) 등 7개 단체의 참가가 확정된 상태로 11월 6일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에서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출발은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전노 시면 반대 캠페인 ②

'광주민중항쟁구속자회'의 전노시면주장을 비판한다.

국민승리21 전북협의회는 그동안 줄곧 전노시면 문제가 정략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계해오면서 지난 22일에는 전노시면 반대서명운동 발대식을 하기도 하였다. 전노시면 문제는 단순히 놓고 병든 전직 두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역사'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김대중 후보 등 여야 후보들은 전노시면 문제를 자신의 득표전략으로 활용하였고, 급기야 우리는 광주지역 일부 단체들의 전노시면 주장까지 접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전노시면 주장을 하게 된 광주민중항쟁구속자회와 몇몇 인사들이 과연 무슨 의도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김대중씨와 경북지역의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빛나간 역측은 아니리라.

70~80년대 걸쳐 민주주의를 외쳐왔다고 자랑해마지 않는 정치인들과 민주당체가 역사적 도의를 저버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다. 무릇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말이 있다.

작은 이익 앞에 정의를 버리는 썩어빠진 보수정치가 유행하는 한국정치에 실망하는 도민들과 500선까지 떨어지는 중시의 모습이 교차되는 것은 웬일일까.

'국민승리21' 전북협의회 준비위원회

'인간의 영상'을 찾아서

제2회 인권영화제 전주·군산 2개 도시에서 개최

제2회 인권영화제가 지난 해에 이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특히 전주 뿐 아니라 군산에서도 열릴 예정이어서 인권영화제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제2회 인권영화제 (상임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는 11월 11일~14일 전주, 11월 20~21일 군산 상영을 앞두고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정의평화정보센터, 군산노동자의 집 등 21개 단체와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최, 그리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등 19개 단체의 후원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증언하는 유대인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담긴 54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쇼아」 등 13개 작품이 선보이게 되는데, 대부분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는 영화들로 전세계의 주요한 인권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인권영화제가 관심을 자극하는 것은 상영되는 영화들이 아직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인권'이라는 화두를 주제로 내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인권영화제를 상영한다'는 것이 갖는 문화적·사회적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과 인천의 인권영화제에 대한 당국의 무식한 탄압은 우리 사회가 '영화 한 편 제대로 볼 수 없는 사회'라는 탄식을 낳고 있다.

제2회 인권영화제 -전주,군산-

일시: 전주 11.11~14 / 군산 11.20~21
장소: 전주 중앙성당 / 군산 오룡동성당
주최: 제2회 -전주,군산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군산 인권영화제 장소 오룡동성당 교육관

11월 20일(목)	2:00 피마의 딸 5:00 명성 6일의 기록 6:30 개막식 (푸른영상초청) 7:30 레드헌트
11월 21일(금)	2:00 양 도살자 3:30 외투 4:00 TeaTime 5:00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7:00 미나마타

서울 조기종결 이어 인천서도 인권영화제 탄압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인간의 영상을 찾아서'란 제목으로 지난 9월 27일 홍익대학교에서 개막되었던 제2회 인권영화제 -서울- 가 정부당국과 경찰, 학교 당국의 압력에 의해 폐막을 하루 앞두고 조기 종결된 데 이어, 인천에서도 폐막 이틀을 앞두고 당국의 탄압을 받아 영화제가 중단되고 말았다.

인천 인권영화제는 경찰의 원천봉쇄 입장과 학교측의 상영장 봉쇄 및 단전 방침에도 불구하고 10월 18일 상영이 강행되었다. 그러나, 서울 상영시 문제되지 않았고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영화제에 이미 출품, 상영된 바 있는 '레드헌트'(하늬영상 제작, 조성봉 감독)에 대한 이적성 시비와 집행위원 3명의 체포와 집행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 협박 등의 국면을 맞아 집행위원 3명의 석방을 조건으로 영화제는 조기종결을 맞이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 인권영화제는 당초 기독교회관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기독교회관측에 대한 당국의 압력으로 갑자기 상영이 취소되었다가 홍익대로 상영장이 옮겨지는 등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탄압에 맞서 영화제 상영을 강행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인 서준식씨(영화제 집행위원장)가 경찰의 소환을 받고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인권영화제를 조기 종결하게 된 것은 "계속되는 경찰의 압력으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영화제가 조기 종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정부당국과 경찰, 학교 당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인권영화제 집행위에서는 당국의 이와 같은 인권영화제 탄압은 지난해 연세대 사태 이후 지속되는 일련의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시내 교회, 성당, 학교 등에서 현재까지 영장상영을 계속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구좌 : 예금주 전주형
국민은행 : 506-21-0876-764
농협 : 508-02-053278

제2회 인권영화제 -전주·군산- 상영일정표

11.11일(화) ~ 11.14(목)까지의 전주 상영일정 (군산은 2면에)

2:00~6:40	쇼아 1	프랑스/1985/폴로드 랑즈만 감독/545분/다큐멘터리/컬러/1986년 베를린영화제 칼리가리상 수상 ▶ 2차대전 당시 나치는 600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죽음의 수용소를 회고하는 유대인들의 충격적인 증언집.
7:00~8:30	개막식	제2회 인권영화제-서울-집행위원장 서준식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초빙하여 영화제 진행 과정의 이야기와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들어본다.
8:30~10:00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미국/1991/니시아마 마사히로 감독/91분/다큐멘터리/컬러 ▶ 시가라키에는 약 106명의 정신 지체장애인이 있다. 거기에는 '경제'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2:00~6:40	쇼아 2	한국/민가협 제작/여균동 감독/12분/극영화/컬러 ▶ 양심수 강용주(현재 복역 중)와 그의 어머니의 소망. 1996년 민가협 '시와 노래의 밤'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것.
7:00~7:12	외투	한국/전승일 감독/8분/컴퓨터2D애니메이션/컬러 ▶ 그림 그리기를 통해 양심수를 생각하는 어린이의 마음.
7:12~7:20	사랑해요	대만/1995/후 샤오시엔 감독/108분/극영화/컬러 ▶ <비정성시>, <희롱인생>에 이은 대만 현대사 3부작의 완결판. 1950년대의 '백색테러'가 낳은 대만의 깊은 상처.
7:30~9:30	호남호녀	

2:00~4:00	새의 노래	볼리비아/1994/우카마우 집단/117분/극영화/컬러 ▶ 선주민에 대한 백인지배를 영화화하기 위해 선주민 마을에 온 영화집단. 그러나 그들은 선주민 문화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4:00~6:00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일본/1987/하라 카즈오 감독/122분/다큐멘터리/컬러 패전을 앞둔 남양군도. 일본군은 인육(人肉)을 먹었다! 천황의 전쟁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칼날 같은 사나이.
6:00~7:30	바이바이 바브시카	미국/레베카 프레그 감독/75분/다큐멘터리/컬러 ▶ 평범한 여성들에게 소련이란 무엇이었는가? 처녀 시절에 러시아혁명을 겪고 소련체제를 살아온 할머니들의 이야기.
7:30~8:40	레드헌트	한국/1997/하늬영상 제작/조성봉 감독/67분/다큐멘터리/컬러 ▶ 제주 4·3항쟁 당시의 '빨갱이 사냥'. 1948년 인구 27만의 제주에서 3만에서 8만에 이르는 주민이 죽었다.
8:40~10:00	레드헌트 감독과의 대화	영화 레드헌트의 제작과정과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의 현주소를 들여보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2:00~4:00	미나마타	일본/1971/쓰시모토 도리아키 감독/120분/다큐멘터리/흑백 ▶ 일본의 전형적인 공해병인 '미나마타병'. 베를린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다큐멘터리의 고전.
4:10~5:30	양 도살자	미국/1977/찰스 버넷 감독/87분/극영화/흑백 ▶ 황폐한 흑인사회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양 도살 노동자의 삶. 직업은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규정한다. 흑인영화의 고전.
5:30~6:40	명성 6일의 기록	한국/1997/푸른영상 제작/김동원 감독/74분 다큐멘터리/컬러 ▶ 1987년 6월항쟁의 기록제가 되었던 6일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관한 기록.
6:40~7:30	김동원씨와 관객과의 대화	'명성 6일의 기록'을 제작한 푸른영상의 감독 김동원씨와의 만남.
8:00~폐막식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열립니다.

인권영화제 후원계좌 : 전북은행 535-21-0301341
(예금주 문규현)

인권영화제는 모든 작품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 한마당

10월 27일에서 31일까지 전북대 합동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INP)과 전북대 정보통신과, 벽골제의 주최로 정보화사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열린 전북도민을 위한 행사였다.

인터넷 시연회, 무료교육, 정보통신 영화제, 정보통신운동 포럼, 폐회식의 순으로 5일간 진행된 정보통신 한마당은 특히 정보통신운동 포럼의 내용이 다양하였다. 29일은 정보화 사회,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민노총 전북지부 사무국장 이송준씨의 발제로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자본주의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조건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노동운동진영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30일 '정보통신의 발전과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운동'에서는 현 사회에서 정보통신의 발전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현상을 얘기했다.

31일 '리눅스를 이용한 독립네트워크 구축은 공개 OS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리눅스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진행시킨 자리였다.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 한마당을 통하여 보다 큰 정보통신운동의 장이 되었던 것 같다.

금요일에 만납시다 (금요일집회)

[군산미군기지 공항활주로 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문재곤, 오충일)에서는 매주 금요일 12시~1시까지 미군기지 앞에서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군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성실한 협상을 할 때까지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미군기지에서 항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땅을 찾는 작은 실천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은 금요일 점심 시간에 미군비행장 앞으로 달려오십시오.

일시: 매주 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장소: 미군비행장 앞

문의: 군산미군기지 시민모임집행위원장

최종수 신부 (나운동성당 467-8788)

두바퀴로 여는 평화의 날



미군기지공항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자전거 타기대회

일시: 11월 8일 오후 2시~4시

장소: 신시청~비행장까지 (집결지: 군산시민문화회관)

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를 타고 함께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우리 땅에서 마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면 어떻게 자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현재 미군과 국방부는 군산미군기지의 민간항공기의 공항활주로 사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측은 우리에게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지금보다 3~4배 이상 올려주고 활주로의 보수유지비마저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료로 쓰면서도 민간항공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누가 이땅의 주인인지를 헛갈리게까지 합니다. 우리 땅 사용료를 미군에게 받아도 시원치 않을판에 어떻게 사용료를 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 군산시민들이 나서서 공항활주로 인상을 막아냅니다.



평화와인권

제 79호

1997년 12월 8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문 규 현

편집인: 문 만 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숲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0652-76-1253 / 팩스: 74-7486 / ID: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국회는 악법 생산공장?

11월 17일 국회에서 영장실질심사 제 축소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 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줄속적으로 처리된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13일 민변·민가협 등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국민승리21·전국연합·(전자주민카드 전북 공대위) 등이 규탄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전북시민운동연합·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INP)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5일 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매주 토요일 규탄집회와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단체, 잇따른 규탄 집회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3일 오전 내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의의 유선호·이기문 의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부쳐졌으며, 같은 날 오후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5표로 처리되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의원 1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백 1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초 이날 표결에는 국회의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 미달로 법안 통과가 어려웠으나, 신한국당은 서둘러 소속 의원들을 참석시키고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해야

통과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병역사항 사진 지문 발급기관 등 9개 항목이 수록된다. 수록항목이 당초 35개 항목에서 대폭 수정된 셈인데, 주민카드와 관련해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사생활 침해 부분이다.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됨으로써 국민인권신장을 위한 혁명으로부터 평가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하게 되었다.

올 1월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라는 원칙 하에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인권보장에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였다. 또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달라진 점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수사 초기 경찰의 고문과 가혹수사가 대폭 사라진 점이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못마땅함을 드러내던 검찰 측이 영장실질심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급기야 폐지되고 만 것이다.

흔란한 대선 정국을 틈타 국민의 기본권에 밀접한 각종 인권법률들이 후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장심사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고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제도이다.

전·노·사면반대 캠페인 ③

전·노·사면은 민주주의를 말아먹는 푸장!!

전두환 군사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쓰러뜨린 지 10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전두환·노태우의 사면이나 주장하는 보수정치권들의 정치놀음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노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거리캠페인을 벌입니다. 10년 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군사독재를 굴복시켰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김영삼의 오만과 독단을 굴복시킨 것처럼, 자각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주와 정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전북본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위한 법 기틀 마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하 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만 3년 이상 끌어오던 법안이 11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처벌법 제정은 9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별법) 제정, 97년 (특별법) 개정에 이은 여성운동의 성과이다.

김영삼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임기 내에 실천했다.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보다는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온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여성 사회단체의 노력이 끌어낸 결과였다. 특별법과 처벌법의 제정등을 통해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결국 문민정부 아래서의 여성들의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벌법]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로기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피해자가 요구할 때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을 해야 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계의 요구를 1백% 가까이 수용한 선진적인 것이었다.

여성인권운동의 승리
한일신학대에서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는 신혜수 교수는 [처벌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즉, [처벌법] 제정은 그 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면, 1) 가정폭력범죄가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고 2)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또한 경찰의 조기 개입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폭력사건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적절한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과 일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상담, 치료명령 등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식전환 등 속제로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말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했다. 강간, 아동성학대, 아내구타, 성희롱 등은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 씨, 서울대 조교 우희정 씨의 폭로 등을 거치면서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성을 비롯한 각계의 노력이 특별법과 처벌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다.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처벌법 또한 입법 정신에 걸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 각계의 감시와 감독도 더욱 요청된다.

▶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집회와 서명운동

'창살없는 감옥'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집회와 국민서명운동이 계속된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 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외환은행 앞
주최: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0652-232-9151

▶ 전·노 사면 저지 집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우연찮게 (!) 전직 두 대통령의 '무조건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전·노 사면을 저지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자들의 집회가 계속된다.

일시: 1997년 12월 13일 (토) 2시
장소: 코아백화점 앞
주최: 국민승리21 전북본부
문의: 0652-251-0063

▶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교육 - 전북 공대위

전자독재시대의 신호탄인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공대위에서 귀 단체를 방문합니다. (232-9151)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안내: 0652)76 - 1253
후원구좌: 예금주 전 준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전북은행 535-21-0027850

인권영화제, 그 후

문규현 신부, 국보법 조사받아 관객엔 관람소감 써내라

인권영화제가 끝난 뒤에도 검찰과 경찰의 반인권적 작태는 끝나지 않고 있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지난 달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28일 기소되었고, 문규현 신부(전주 서학동성당) 역시 지난 4일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 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포 등)을 적용시킨 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같은 영화가 상영됐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 시비와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영화의 내용 자체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달 20일 인천지법(김기영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론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문규현 신부에 대한 압력과 병행하여 경찰이 <레드헌트>를 관람한 지역 민주당체들의 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영화 상영 당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을 관독해 찾아다니며 <레드헌트> 관람 여부, 상영장 풍경 등을 묻고, <레드헌트>를 관람한 감상문을 써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쓰지 않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만간 출석요구서가 보내지면 협조하여 응해달라"는 등 심리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수 석방 캠페인 ④

다시 양심수를 생각한다.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 교수에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다시 기각되는 수모를 당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심의를 거쳐 상영된 <레드헌트>를 인권영화제에서 재상영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막상 구속해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 목적은 <레드헌트>가 아니라 '인권운동가 서준식의 구속-활동제약-이었던 것이다.

선거철이 오면 오래 불어오는 북풍이며 좌익용공 운운이 아직도 악발이 받는다고 믿는 걸까? 몇해 전 혹은 몇몇 해 전부터 시중에 떠돌던 출판물·영상물에 새삼스레 이적성 시비를 걸고 있는 검찰을 보고 있다면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얼마 전 대선 후보 김대중 총재의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양심수 석방'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양심수 논란이 일었다. "공산주의자를 제외한"이라는 조심스러운 단서를 달고 양심수의 개념을 축소한 '양심수 사면론'은 그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즉각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신공격과 색깔시비의 용단폭격을 받았다.

이런 상식 이하의 '양심수논쟁'의 정체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추악한 진흙탕싸움 외의 아무 것도 아니며, 그것은 양심수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이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양심수를 규정하는 데 있어 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산주의자를 제외한'이라는 대목이다.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사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당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조용환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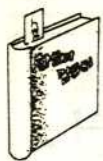
국제엠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자(자기 방어적 폭력은 제외)"로서 "정치적, 종교적, 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을 이유로 투옥, 구금, 기타 신체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인간의 내심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근대 법치국가의 중요한 인권원칙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제외한'이라는 김대중 총재의 발상은 반인권적이다.

또한 "양심수가 있다면 정치인 사면 등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이회창의 비정상적인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양심수'는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든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그 자체로서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양심수'는 권력형 인권범죄의 주범인 '정치인'과 동열에 놓고 맞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어이없게도 검찰은 우리나라엔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고 뻔뻔하게 발표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드헌트>를 상영과 관련 서준식씨를 구속했다. 1천명이나 되는 양심수를 가두어두고 있고, 사회과학서점 주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가두어두고 있다. 급기야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사태를 자초한 이장희 사건이 있었다.

지난 달 14일 민가협은 '양심장례식'을 치렀다. 장례행렬에는 양심수들 가족인 김지영(서준식씨 부인)씨, 조선순(장기수 강용주씨 어머니)씨도 참석했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의 양심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위음 도서출판 민중사/ 94쪽, 3,000원

대인지뢰금지협약 체결을 위한 조약문안 작성회의가 개최되고, 국내에서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결실련통일협회 환경운동연합 전주정의 평화정보센터 등이 참여하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지뢰회의)가 발족하는 등 대인지뢰금지 문제가 국제 평화운동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인지뢰에 관한 문제는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새로운 관심을 얻게 되었고, 비정부기구(NGO)의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민간인이나 군인들의 지뢰사고 피해는 대부분이 6.25 때 매설된 미확인 지뢰에 의한 것이다. 95년 이후 97년까지 일어난 지뢰사고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30건에 이른다.

이에 때맞춰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라는 얇지만 실속 있는 내용의 책자가 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6일 지뢰회의가 출범한 뒤 처음 갖은 12일 집회('대인지뢰금지 협약 가입촉구 집회')에서 문정현(지뢰회의 공동대표)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남북통일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는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있을 대인지뢰 전면금지협약에 임하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를 예외지역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책회의'의 앞으로의 활동과 더불어 이 책자의 발간은 한반도의 비무장·평화를 이룩하고 열악한 평화운동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입문의: 0652-76-1253)

인권영화제로 뜨거웠던 겨울

전주·군산, 각계 관심 속 성황리 마쳐

제2회 전주·군산 인권영화제가 관객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그러나, 전국적인 당국의 영화제 탄압에 영화제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이번 인권영화제에는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은고를영화터, 통일시대전북연대, 전북여성운동연합 등 19개 단체가 조직위원회에 참가하고, 민주주의 민족통일 군산연합, 새시대노동자회, 전북 청년노동자회, 국민승리21 등 20개 단체가 후원단체를 구성해 참가했다.

전주 중앙성당에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인권영화제 개막식에서 상임공동대표 문규현 신부(전주서학동 성당)는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억압과 후퇴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인권영화제는 개막식에 앞서 9시간 30분 짜리 다큐멘터리 영화 <쇼아>를 상영,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의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 공간기관에 의해서 유명해진 <레드헌트> 상영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전북 공동대책위원회]의 몫이 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전주 인권영화제측은 성명서를 내 "당국의 폭력 앞에서 인권영화제를 지켜내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레드헌트> 상영을 취소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서준식...공대위]가 이를 뒤 <레드헌트>를 공개상영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 인권영화제는 연인원 1,000여명의 관객을 모으며, <명성, 그 6일의 기록> 상영과 김동원 감독과의 대화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군산 인권영화제는 외압에 의한 파행을 겪지 않은 유일한 제2

회 지역 인권영화제라는 기록을 남겼다. 경찰 당국은 전투경찰과 사복경찰관을 상영장 입구에 배치했으나, <레드헌트>를 비롯한 준비된 영화 전 작품이 공개적으로 상영됐다. 군산 영화제 대표를 맡은 문정현 신부(군산 오룡동 성당)는 "<레드헌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라고 일갈한 뒤 "제주 4.3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살의 진상을 널리 알리자"가 말했다. 또 당초 예상을 웃도는 연인원 700여명의 관객이 연일 내리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상영장을 찾아 영화제 준비측을 흐뭇하게 했다.

동양차체 현장, 노조탄압으로 얼룩

탄압 규탄대회 열려

사측의 노조원 폭행, 노조위원장 납치감동, 노조에 대한 온갖 기만책 등 전근대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유명해진 동양차체의 노사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동양차체는 대우자동차에 차체 전부를 납품하는 업체로 일용직과 관리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250명 정도인 중소기업체로 군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80여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지난 달 22일 군산 구시청 앞에서 열린 '노조탄압 규탄대회'에는 400여명의 규탄 인파가 몰려들어 동양차체 투쟁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기도 했다. 노조는 사측이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해고된 5명의 조합원이 원직 복직 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2시 항의집회를 열고,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평화와인권

98년

80호-128호



평화와인권

제 80 호

1998년 1월 5일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문 만 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숯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 0652 - 76 - 1253 / 팩스 : 74-7486 / ID : (천리안. 나무누리. 녹두비비) paulmun

험난한 정보민주화의 길 통신연대, 전자주민카드 등 10대 사건 선정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97 정보민주화 디딤돌과 결림돌, 그리고 '97 정보민주화 10대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선정 기준은 97년 정보기본권 보장과 정보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한 정도와 침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디딤돌과 결림돌로 나누었다.

1997 정보민주화 디딤돌로는 △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대표 최두열)과 △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사업단(약칭 INP, 단장 임창현), △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황승하) 등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INP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통신연대에서는 "전주에서 결성된 INP는 녹두BBS통신망·홈페이지 운영, 전자주민카드 시행 저지를 위한 [전북공대위] 주도적인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정보민주화사업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들었다.

'97년 정보민주화 결림돌에는 △ 전자주민카드, △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등이 선정되었는데, 특히 전자주민카드는 "사생활을 위협하는 주범"으로서 "세계최초의 전국민 전자감시체제를 선도하는 총아"라는 평가와 함께 "그 배경에는 과거 일제 및 군사정권의 유물인 주민등록증 제도가 원흉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1997년 정보민주화 10대 사건으로는 △ 한총련 출범식 관련, 통신 ID/계시물 대량 삭제 (97.6), △ 새로운 진보언론의 가능성 선보인 총과업 통신지원단 활동(97.1), △ 세계 최초 전자주민카드 시행법안 통과(97.11),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시행령 16조 개정령(안) 개악 철회(97.1) - 수사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위 개정(안)은 통신연대, 민변 등의 사회단체 반발로 무산.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여전히 대표적인 통신 악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 그레이스 백화점 여자화장실 CCTV 설치(97.7), △ 북한 홈페이지 Geocities 차단 조치(97.10) - 이는 북한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사상의 이유로 인터넷을 검열하는 후진국"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 정보공개법 시행(97.12) - 96.12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공개법이 1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 등이 선정되었다.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구좌 : 예금주 전 준 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전·노 사면 반대 캠페인 ④

전·노 사면 복권과 부정부패 정권인 사면을 반대한다!

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 우리는 그 동안 누누이 국민의 의사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노의 사면과 복권에 반대를 해왔다. 동족을 학살한 5·18과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법질서의 형평성과 국민의 양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전·노 사면과 복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전·노의 참회없이 국민의 정서를 호도하고,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모독하는 전·노 사면과 복권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또한 재벌과 권력의 합작으로 현재의 경제적인 위기를 불러왔던 바전두환·노태우의 소위 비자금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을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세운 정경유착의 주범들을 사면 복권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 김대중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의 불법적 정권에 저항한 양심수를 생각할 때에, 5·6공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고 부정비리의 주범들과 광주학살의 주범들을 석방하는 데 앞장선다면 김대중 당선자도 민주진영의 강력한 비판과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1997년 12월 20일)

신년사 98년 호랑이의 해를 희망찬 인권의 해로!

1997년은 국회의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전국민의 저항의 함성과 인권수호의 기치로 시작하여 국가경제 도산의 매스운 한파로 막을 내렸다. 현재 모든 국내외의 관심은 당연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의 임금동결, 노동자들의 수당 반환 등등 고통분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자본과 정권은 정리해고를 통한 경제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주범인 재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부정하게 모은 자산을 팔아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재벌의 해체와 그에 따른 경제체질의 개선이다.

인권은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기에, 어떠한 조건에서도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더욱 더 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현재 한국에는 800여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있다. 양심수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헌신과 투쟁이 바로 인권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들의 석방과 사면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줄기찬 노력을 경주해 1998년은 인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한해로 만들자.

[작년 한 해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평화와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충고와 조언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심수 석방 캠페인 ⑤ <자료>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1997년 10월 1일 현재, 총 859명

이 자료는 민가협이 1997년 10월 1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1997년 10월 1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859명이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609명, 노동자 38명, 농민 1명, 재야 및 기타 122명, 군인 32명, 장기수 57명이다. 10월 1일 현재 양심수 859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 859명의 63.2%인 543명이다. 이들을 신분별, 적용법규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신분별 분류

총	학 생	노동자	농 민	장기수	재야·기타	군·경
859명	609명	38명	1명	57명	122명	32명

적용법규별 분류

국가보안법	특공	집시법	노동관계법
543명 63.2%	35명 4.0%	444명 51.6%	9명 1.0%

- ▶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특공 : 특수공무집행방해 / 노동관계법 : 업무방해. (3면에 계속)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97. 10. 1. 현재 총구속자 4,060명

93년 (총 195명 / 국보법 105명)

단위 : 명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구속자	7	7	4	19	19	43	28	7	13	28	20
국보법	1	3	2	16	6	16	12	5	7	20	17

94년도 (총 775명 / 국보법 389명)

단위 : 명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구속자	4	42	24	25	23	216	131	97	72	74	26	41
국보법	3	35	18	14	8	47	62	58	43	53	19	29

95년 (총 623명 / 국보법 285명)

단위 : 명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구속자	13	29	38	36	109	98	54	69	31	55	82	9
국보법	10	22	27	13	40	25	18	34	8	21	60	6

96년 (총 1,269명 / 국보 494명)

단위 :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구속자	30	38	41	55	86	94	68	549	76	135	83	14
국보법	21	27	20	24	38	43	48	57	53	86	73	4

97년 (총 1,198명 / 국보 542명)

단위 :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구속자	23	31	70	101	101	442	183	145	98	4
국보법	9	20	30	62	31	144	105	58	79	4

청소년 인권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위음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 1997.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장유유서'와 같은 전통적인 규범에 의한 사회적 제약은 많지만 사회적 배려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뒷전인 경향이 있다.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행동이나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기본권을 이 책에서는 청소년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청소년은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2장)가 필요하고, 배우는 시기에 '학습과 문화에 관한 권리'(3장)를 보장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적 권리와 자유'(4장)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양육과 보호에 관한 권리'(5장), 그리고 전통적으로 청소년에게 경시되어 온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6장)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이 책은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청소년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청소년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 협의회' 조직과 운영도 함께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빠뜨리지 않는다.

이 책에 부록으로 실린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인권선언,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위원회의 권고안, 4. 인권 관련 단체 소개, 5. 인권 관련 서적 안내.

양심수 면회 거부, 항의시위

전주교도소 인권의 사각지대

전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대표 오경숙)와 전북 인권선교협의회(대표 김현식)는 1997년이다 다가기 전에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양심수를 면회하고자 했으나 교도소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주교도소는 또 양심수들에게 영치금을 넣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민가협과 인선협 등 50여명은 양심수의 면회를 요구하며 교도소측을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1997년 12월 31일 벌였다.

이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광주학

살의 원흉들을 사면 복권시킨 현 정권이 그들에 의해 영어의 몸이 된 양심수를 하루빨리 석방하지 않은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을 면회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날(30일) 24명의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를 면회하고자 했으나 교도소측은 별다른 이유없이 면회를 거부하고 영치금조차 반입을 불허하는 반인권적인 작태를 보였다.

민주사회단체 탄압 줄이어

부민노청 이어 미래정보센터 -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지난 해 11월 17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 회원 12명(회장 박재현, 33세)이 일제히 연행된 데 이어, 미래정보센터 회원 4명(연구팀장 백성기)이 지난 달 28일 오전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과 공안당국의 가혹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미래정보센터는 '우리사상연구실'의 후신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백태웅, 박노해씨 등이 활동했던 과거 사노맹 계열의 단체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밝히는 연행사유는 우리사상연구실과 미래정보센터의 기관지인(미래통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연행자 가운데 강공우씨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승리21 선거대책본부 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백성기씨와 김치영씨는 사노맹 재건 사건으로 93년과 92년에 각각 구속되었다가 출소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민노청의 경우, 가족 면회와 불구속 석방자의 말에 따르면, 연행 직후 40여 시간 동안 연행자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받는 등 가혹행위가 자행됐으며, 그 뒤에도 '전·노 사면 철회와 양심수 전원을 석방 위한 단식투쟁' 중 구속자 11명 전원이 징벌을 당하고, 1명이 구타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구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구치소측은 교도관도 시인한 구타 사실을 끝내 부인했다.



평화와 인권

제 81호

1998년 1월 19일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문만식

정의평화 정보센터 ⑤⑥①-①⑥②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번지(송정이 성지 사회관)
전화 : 0652 - 76 - 1253 / 팩스 : 74-7486 / ID : (천리안, 나우누리, 녹두비비) paulmun

경제위기 속 민중 삶 벼랑

IMF 시대, 서민·약자들만 더욱 불리

재벌체제 경제위기가 불러온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군산 소재 15개 자동차부품, 운송 등 대우자동차 하청업체에서는 최근 6개 사업장에서만도 200명 이상이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단지 1, 2차에 한한 이 무차별 해고사태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른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군산시협의회가 이들과 노동자들에게 심터를 마련해줄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 처지이다.

작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는 500개 이상의 업체가 도산했다. 익산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체가 대다수로 여성 해고자의 비율은 훨씬 높다. 도산을 모면한 업체들도 휴업, 일거리 축소 등으로 노동자의 고용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북은행, 조흥은행 등 국내 금융업계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퇴사·해고 압력은 크다. 전북 여성노동자회의 봉귀숙씨는 "경제적 위기상황 때마다 생존에 가장 위협을 받은 것은 여성노동자들이었다"며 "공식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업계의 경우 임시직 노동자, 기능직 노동자들이 일차적 감원의 대상이다. 대부분 대졸자이지만 2-3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야만 하는 기능직 노동자들도 많아 생

존권에 대한 위협은 현실적이다.

장애인 고용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의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종업원 3백인 이상으로서 의무적으로 2%의 장애인을 고용할 사업장은 32개로 의무고용 장애인은 342명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42명으로 의무고용 대상의 4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리하고 철회·재벌체제 개혁

민주노총전북, 정리하고 도입하면 강력투쟁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장 염경석)는 15일 국민회의를 방문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정리하고 제 도입 완전 철회"와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벌체제 개혁 수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달한 성명서에서 "노동자들은 전국, 전 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리하고, 임금삭감·동결, 임금체불, 노조탄압 등으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정리하고제 도입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인양 강행 도입을 기도하는 등 정치권은 반노동자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를 장악하려는 국제금융자본 및 투기자본, 그리고 이를 무조건 추종하는 현 경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1월 13일 현재 만도기계익산지부 등 23개 사업장에서 불법 정리하고, 임금체불·삭감, 단협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자들은 지난해 말과 이달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상여금도 100%에서 50%까지 체불·유보·반납·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월차·생리휴가 등 사용을 반감제적으로 반납시키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 노조탄압으로 유명한 전북대학교는 학교측에서 노동조합에 단협 해지를 '통보'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제각료와 개발독재시대 경제관료들 역임한 김대중당선자측의 일부 경제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회의와 김대중당선자는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정리하고제 도입 철회, 근본적인 재벌체제 개혁, 재벌총수 퇴진, 그리고 경제파탄책임자 처벌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부 전주사무소를 방문, 최근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한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전달하고 "노동부는 경제위기를 빚자한 탈법적인 인원감축, 임금체불, 단체협약파기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업주들을 즉각 처벌하고 시정조치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가정폭력방지법 7월 1일 시행

여성단체, 조기정착 위해 다각 노력

10여 년 동안 줄기찬 여성계의 운동에 힘입어 작년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날 전격 통과된 가정폭력방지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을 주관하는 부처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여성계의 움직임도 올 한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법인데, 잘 시행되도록 법여성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운동연합과 한국 여성의 전화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에 민간여성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법의 해설자료 및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자료집을 발간해 홍보를 벌이고 이 법과 관련이 있는 경찰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의사·교사 등에 대한 우선 교육을 요구할 계획도 마련해 두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하 처벌법)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피해자가 요구할 때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을 해야 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개혁과제, 이제는 공동대응하자"

전국적 지역연대운동조직 활동 지지개

전국적 지역연대운동이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이하 지역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운동은 "새로운 질 지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질'이란 이 조직체가 지향하는 "운동 내 민주주의 운영을 확대하고 협력 속에서 논의와 내용을 정리하고 사업하는 수평적인 연대구조"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지역연대가 전국적 연대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들은 1. 지역사회 발전의 의제를 형성, 선도, 2. 분권화에 기반한 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한 활동, 3.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개입과 주민참여운동 및 국가적 민주개혁과제에 대한 공동대응, 4. 지속 가능한 사회개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5. 제한없는 정보·정

책교류, 공동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운동 상호간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들이다.

지역연대는 기본적으로 매년 주요 공동사업과제를 확정하여 지역운동연대와 해당지역단체의 이름으로 전국공동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일상적으로는 정보교류, 사업아이템교류, 정책협의, 공동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참여단체들의 상호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권역별 혹은 광역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의평화정보센터도 참가하고 있는 지역연대에는 전국적으로 23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

김현철, 전·노 사면 석방에 이어 한보비리 범죄자들도 줄줄이 석방되고 있습니다. 모든 양심수의 무조건 석방을 주장하는 사제단에서는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양심수 석방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시: 98년 1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전주 평화동 천주교회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문의: 0652-76-1253

▶ 양심수 후원의 밤

민가협은 양심수 없는 세상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양심수가 단 한 사람도 없는 나라를 위하여 양심수 후원기금을 마련하고자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일시: 98년 1월 22일(목) 오후 7시
장소: 동화혁명기념관(231-3219)
주최: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전북여성의전화, '전주(전북)여성의전화'로 개명

지난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북연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전북여성의전화]가 [전주(전북)여성의전화]로 명칭을 변경했다. 주소와 상담전화번호 등은 이전과 같다.

[평화와 인권]이 2월부터는 매주 발행됩니다. 좀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리해고의 희생양, 오! 그대 여성.

왜 여성인가? 왜 여성이 정리해고의 희생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비전문직은 물론이거니와 전문직으로 일컬어지는 광고회사·방송국 등에서도 여성은 어디까지나 대체인력에 불과하다. 최근 정리해고와 명예퇴직건을 마무리짓고 있는 전주의 한 방송국으로 가보자. 3층 편성국은 요즘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다. 명예퇴직건으로 정들었던 직원들이 상당수 빠져나간 뒤인데다, 며칠전 단행한 자리바꿈으로 바로 옆에 있던 동료의 책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지 때문이다. 아무래도 꺼림칙한 것은 라디오 제작팀의 여성PD 들이 한직으로 물러난 데 있다. 이 두 여성PD는 그동안 육십몇 자신의 일을 해온 열성PD로 알려져 있어 더 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방송국에서도 여성은 어디까지나 대체인력에 불과했던 것이다. '바늘구멍 뚫기'라는 방송사에 공채로 당당히 입사한 그들이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을 버림으로 밀어내는 것은 방송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절감한 것이다.

여성노동자 불이익 없도록 행정지도 지시했다는 우리들의 사랑스런 총리는, 그리고 그 서슬퍼런(?) 명령을 뚫고 우리들의 깜찍한 노동부장관은 어디로 갔는가! 여성고용평등법이 제정된 뒤 10년 동안 어렵게 이룩한 여성노동운동의 성과가 한순간에 불거품이 될지로 모를 그런 순간이다. 여자 농구관에 여자심판이 등장했다고 연 사를 떠들썩하기만 한 모양새가 웬지 반갑지 않다.

정부, 근로자파견제 2월 도입키로

중간착취 고용불안 심화 우려

지난 93년 처음으로 국회에 입법발의됐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에 무산을 거듭했던 근로자파견제가 2월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파견제란 파견회사가 소속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A회사가 자체 고용한 노동자 갑을 B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B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할 경우 A사는 파견사업자, B사는 사용자 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두 회사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노동자 갑은 B사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현재 22만 5천명으로 추산되는 파견근로자들의 기본적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가들도 근로자파견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해왔다.

자본가들은 특히 "파견근로의 증가는 시장경쟁의 격화, 기술혁신, 근로자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은 △임시직·파트타임 등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해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등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계는 특히 "근로자파견제 도입은 불법용역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까지 강조한다. 사실상 직업소개 기능만 하고 있는 파견업체들이 용역비에서 관리비와 이윤을 빼고 난 나머지

머지를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정규직보다 오히려 3시간 많은 주당 50시간에 달하는 반면 월 평균 급여는 정규직보다 41만원 적은 1백 11만원에 그칠 정도로 임금은 적고 노동강도는 오히려 더 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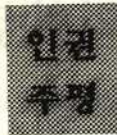
자본가들의 이윤 남기기 요구에만 정부는 이제까지 지나치게 편을 들어왔다. '구조적 약함'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소수 자본가들과 정권의 이러한 유대의 청산이 아직 요원한 상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국민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항상 도덕적 우위에 있다.

자본과 노동간의 갈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그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들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가 정의를 선택하려면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는 대신 공공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직업훈련을 대폭 확충하는 방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구좌: 예금주 전 준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 4면에서 이어짐] 1997년 12월 30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645명이다. 외견적(外見的)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 양심수의 숫자는 더욱 증가하였다. 영화 「레드 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를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검찰이 한 말이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똑같은 영화라 하더라도 누가 상영하는가에 따라 법적용의 기준이 달라진다."



인권선언 50주년과 우리의 현실

김 승 환 (전북대법대 교수)

1948년 12월 10일 유엔은 총회결의 제217조 A(III)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 이 선언은 그 후 각국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세계인권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발로 인권보장의 국제연대사상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나라 국민의 인권은 그 나라 고유의 문제일 뿐이지 다른 어떤 국가 또는 어떤 국제조직도 이에 개입할 수 없는 문제였다.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이자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인권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흔들여 놓았다. 인권은 결코 개별 국가 내에서 고립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국제단체 내지는 조직 사이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의 군국주의, 독일의 나찌즘,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만행을 통하여 인류는 인권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2조 이하에서는 차별금지, 생명·자유·권리, 노예제도·매매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의 평등, 재판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권, 죄

형법정주의, 주거·통신의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망명권, 국적보유권, 혼인의 자유, 재산권,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회보장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실업자 보호,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 건강권 및 생활보장권,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 향유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열거하고 있는 인권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 인간은 양심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또한 한 나라의 국민의 인권은 결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공동의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인권은 인류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그것이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독일 나찌스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세계가 침묵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다. 이것은 일본군이 저지른 생체실험,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인류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

유엔 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선언한 지 어느덧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계인권선언은 각 블록의 인권선언을 자극하였고, 각국 헌법의 기본권 장전에 인권보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왜 유엔이나 국제인권단체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의견을 표명하고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이제 눈을 우리의 인권 현실로 돌려 보자. 적어도 대한민국은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짓밟

힐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 주는 표본적인 나라이다. "누구든지 생각한다는 것으로 처형될 수 없다."는 것은 선진 세계의 움직임일 수 없는 법격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자유당 치하의 진보당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멸절한 사람도 한 번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낙인찍히면 그 꼬리표가 평생 붙어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 고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상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에게는 무차별적으로 고문이 가해졌다. 김영삼 정권 초기 내무장관을 하던 정치인 최 아무개는 어느 월간지의외의 대답에서 "사상범의 경우에는 고문을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의 내심의 소리다.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양심은 본질적인 것이다. 양심은 하나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결의 대상도 아니다. 다양한 부류의 인간이 다양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양심만이, 다수의 양심만이 허용되었고 강요되었다. 소수의 양심에 대한 관용의 풍토가 자리잡을 여지가 없었다. 독일의 보수주의 법학자인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또는 도덕적 확신에 기하여 죄를 범하는 확신범은 파렴치범에 비하여 관대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소수의 양심에 대해서는 관용이 베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참한 태도가 가해졌다. [→ 3면에 이어짐]



평화와 인권

제 82 호

1998년 2월 3일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문 규 현

편집인: 문 만 식

· 전화) 0652-76-1253 · 팩스)0652-74-7486 · 통신 ID : paulmun(천.나.복두비비)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human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기도회’ 등 양심수 석방운동 활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각종 움직임이 새해 들어 우리 지역에서도 일고 있다.

지난 달 22일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오경숙)가 주최한 '양심수 후원의 밤'에는 70여명의 몸으로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강희남 목사를 비롯하여 전부 28명의 전북지역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외침이 드높았다. 민가협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조작의혹이 제기됐던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20여명의 학생들이 구속된 바 있고, 87년 6월 항쟁 당시 시위 도중 버스로 전경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으로 10년 제 복역중인 허정길 씨 등 많은 정치범이 이 시간 현재까지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장기수 면회, "관계기관협조 하에" ?

23일에는 전국적으로 새해 첫 시국기도회가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 주최로 열렸다. 평화동 천주교회에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 강연한 박기평 신부(사노맹 관련 국가보안법 구속자 박노해씨 친형)는 성경에서 "강도당한 자를 보살피고 치유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양심수를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우리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사제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 "국민의 민주화 염원에 힘입어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모든 양심수 무조건 즉각 석방"하고 "과거 불의한 정권에 의해 유지되었던 제반 악법과 제도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두환·노태우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추징하여 국고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오후 천주교 사제단은 전주교도소를 방문. 수감중인 전체 12명의 장기수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제단에서 밝힌 교도소장의 말에 따르면, 장기수 금 양심수 면회는 '관계기관' 협조를 사전에 얻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교도소장의 말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구체적으로 '경찰, 검찰, 안기부'다. 사제단 소속 신부들은 장기수 면회 불허에 항의하는 시위를 교도소 정문 앞에서 두 시간 가량 벌인 뒤 안기부 전복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지난달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숍]에서 발표된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인권과제'를 발제한 박대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씨는 차기 정권의 1차적 인권과제로 "과거 인권유린의 완전한 청산"을 들고 그 가운데서도 "정치범의

석방"이 제1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박씨에 따르면, "과거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발생했던 조작간첩사건, 장기수금중인 장기수를 비롯한 정치범들의 전면적인 사면은 우선적인 과제다. 사상·양심의 문제로 인한 정치범(양심수)은 우선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복권된 인사들에 대한 복권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정권 하에서 억울한 조작 사건과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는 재심(再審)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석방된 정치범들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특히, 보안관찰법에 의한 제한)는 철폐되어야 한다."

차기정권 제1과제는 '양심수석방'

김대중 차기 정권 출범을 계기로 백태웅, 박노해, 황석영씨 등 사노맹 관련자와 문인들이 사면 복권될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과, 수배중인 잠재적 양심수들의 사면 복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구좌 : 예금주 전 준 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평화와 인권」 인터넷 홈페이지
http://kor.inp.or.kr/human
E-mail: human@kor.inp.or.kr

민언협이 주장하는 '언론개혁 10대 과제'

(편집자주) 지난 1월 20일,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제목으로 시민사회중고단체의 공동 정책워크숍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 노동, 서민 생존권, 인권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민언협은 민언협이 제시한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소개한다. 민언협은 1984년 12월 19일 해직기자회와 진보적인 출판인들이 모여 결성한 전문언론노동단체다. 민언협은 말지를 창간했으며 한겨레신문 창간을 주도했고, 1988년 이후 시민들에게 문을 열어 신문방송 모니터, 언론학교, 대학언론 강좌 등 언론교육과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1. 공보처 폐지

독재정권의 언론통제기구로 언론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해왔던 공보처는 폐지되고 최소한의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2. 방송위원회의 독립과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의 개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및 공영방송의 사장선임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3. 언론사 소유구조 개선

재벌의 언론사 소유, 특정인의 언론사 주식지분 과다보유는 규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언론사의 시장과점도 정책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4. 편집, 편성권의 독립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매체소유화를 막고, 권력과 언론의 외압을 막기 위해 편집, 편성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한다.

5. 방송광고영업의 독점해소와 공익자금 운영의 개선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방송사 공동으로 공익적 광고대행기관을 설립하여 방송광고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공익자금의 관리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한다.

6. 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 취급지침의 폐지, 개정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보도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취급지침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7. 미디어교육 실시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수용자의 올바른 매체활용을 위해 미디어교육을 제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8. 시민언론운동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언론의 소비자인 시민들의 언론감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관련단체 및 급조된 관련성 시민단체에 지원되었던 기금들은 정통성 있는 시민단체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9. 강제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

1975년, 1980년 사주와 정권에 의해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보상해야 한다.

10. 국민주방송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공영방송마저 상업화한 방송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 주식으로 건설되는 국민주방송을 허가해 방송의 질적, 민주적 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촉구를 위한 기도회 및 강연회

차가운 바람이 천지를 꿈꿈 얼어붙게 하는 이 겨울, 79세의 병약한 몸으로 군산교도소의 차가운 감방에서 홀로 외롭게 겨울을 나는 분이 있다. 통일인사 강희남 목사의 석방을 위한 많은 기도와 힘을 더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회를 갖는다.

일시: 98년 2월 8일(일) 오후 2시

장소: 임마누엘 교회당

강사: 한승헌 변호사

주최: 통일인사 강희남 목사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문의: 0652-241-0191

▶ 조디 윌리엄스 초청 대인지퇴금지한국캠페인

한국대인지퇴대책회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남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4자회담에서 대인지퇴제거를 의제로 설정해서, 대인지퇴제거를 위한 남북한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 한국대인지퇴대책회의는 1997년 11월 6일 결성되어 현재 2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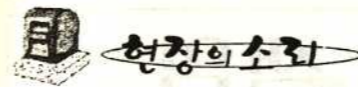
일시: 98년 2월 2일(월)-5일(목)

장소: 서울

주최: 한국대인지퇴대책회의

문의: 02-312-3317-9

『평화와 인권』이 이달부터는 매주 발행됩니다. 좀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코언의 '한국국방비삭감반대' 발언을 규탄한다!

-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

1. "북한이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유혹돼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만큼 방위력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생각해 국방예산의 삭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코언의 발언은 자국의 무기장사를 위해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골적인 위협이다.

2. 한때 한국경제가 잘나가던 때에는 과중한 군사비 부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 이러한 과도한 군사비의 부담은 성장의 질곡으로 되었으며, 현재 우리 정부는 세계 100위권을 밀도는 국민소득의 0.9%만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같은 수준에 있는 '중진국'들과 비교해 군사비의 비중은 2~3배로 많은 반면, 사회복지 혹은 사회복지관계 예산은 2~3배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한 조사는 2002년까지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현재의 반으로 줄여나간다면 30조원의 잉여액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방위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현재 논의되는 5조원 수준의 고용안정기금을 획기적으로 뛰어넘어 사회복지의 일대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우리는 과감한 군축과 군사비의 감축을 통한 사회복지비용의 획기적인 확충을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방장관 코언의 발언은 규탄받아 마땅하며, 한국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택시노동자 권오영씨 분신 중태 '노조탄압', '야간수당체불' 등 맞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던 택시노동자가 분신, 중태에 빠졌다. 경기도 이천시지역 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인 권오영(37세)씨 분신은 25일 오전 사측이 농성장에 난입하여 농성중이던 권 위원장 손발의 쇠사슬을 잘라내고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끌어내던 중 이같은 폭력 만행에 견디다 못해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붙임으로써 일어났다.

악덕업주 횡포가 가져온 한 노동자의 죽음

권 위원장은 지난 23일부터 사측의 노조가입 방해와 탈퇴강요 등의 즉각 중단,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은 채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 중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7년 10월 7일 '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분신한 광주 최도근 위원장에 이어 불과 몇 달만에 일어난 일이다.

권 위원장이 분신하기 불과 며칠 전 불과 며칠 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노동부장관이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약속했음에도, 또 완전월급제 실시가 바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의제 세부항목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비롯이라도 하듯 악덕업주들의 횡포는 계속되고 급기야 또 한 사람의 택시노동자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완전월급제' 숙원 이뤄져야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완전월급제 실시를 기대하여 택시노동자들이 이천시지역택시노조에 대거 가입하자, 택시업주들은 노조탈퇴 강요, 노조가입 방해, 시간통제, 사납금인상 강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

민주노총은 24일, 차기 대통령과

노동부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택시업계 부당노동행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사업주들을 전원 구속 처벌하고, 택시 완전월급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는 전국택시연합회를 해산하고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건설교통부, 자치단체 택시업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주민카드 백지화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돼야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위험을 공감하여 열심히 반대해온 광범한 시민 대중과 학자,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내무부가 그동안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안기부와 경찰이 이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안기부와 경찰쪽의 로비', '480여억원의 탈법적 집행', '안기부의 대공관련업무 종사자 개입' 등은 감사 대상에 올랐다.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 사회단체 공대위'(상임대표: 문규현 신부)는 성명을 내 "전자주민카드 백지화를 환영하지만, 진짜 문제는 '프라이버시보호'의 제도적 보호"라며 "(가칭)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대책위 내부적으로도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운동과 입법사례들을 연구하고 관련단체들과 연대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